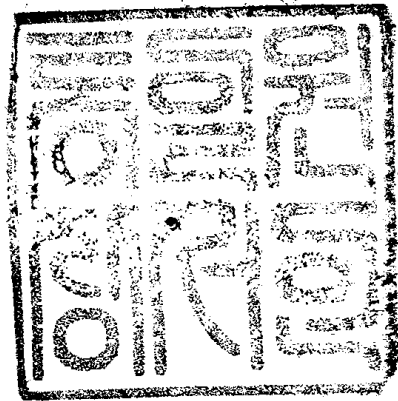


# 「南北基本合意書」採擇 以後의 南北對話 展望



3231  
36P (240911)

142p  
26cm

{  
1992.11.11  
1992.11.11  
1992.11.11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260

# 目 次

I.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의 評價와 第5次 會談 推進方向 .....	3
II. 「南北基本合意書」採擇 以後의 南北對話 展望 .....	45
1. 第1次 討論會 .....	47
2. 第2次 討論會 .....	87

# I. 第4次 南北高位級 會談의 評價와 第5次 會談 推進方向

日時：1991年 11月 1日

場所：大韓商工會議所 12層 會議室

## 〈討 論 者〉

○ 司 會：李相禹(西江大 教授)

○ 討 論：康仁德(極東問題研究所長)

金 惠(外國語大 教授)

安秉俊(延世大 教授)

梁性喆(慶熙大 教授)

柳世熙(漢陽大 教授)

鄭鎔碩(檀國大 教授)

韓昇洲(高麗大 教授)

金達述(南北對話事務局 諮問委員)

사 회 오늘 주제는 미리 보고 드린 프로그램에 나와 있듯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게 되고 두번째는 4차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달라진 태도라든가 그리고 연이어서 앞으로 북한이 피하리라 예상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쳐 본다든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5차 회담과 7일부터 시작될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대해서 대화사무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세가지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서 별다른 주제는 없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각 주제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한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진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자유 토론을 조금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제는 지난번 회담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 이번에 보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하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해서 한토막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 성함이 적힌 순서대로 가급적 길지않은 범위내에서 쪽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인덕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덕 이번 회담의 양측 기조 발언만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제2일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조 발언을 보면 북한측의 태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융통성있는, 부드럽고 유연해진 그런 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측 연설문은 대체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했다고 보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변호사 협회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라 할 정도로 신문에, 가기전에 좋은 백 그라운드가 하나 생겼었는데도 인권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대단히 부드럽게 우회해서 평론한 그런것을 우선 느낍니다. 저로서는 이번 4차 회담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실수없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담담하게 이번 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으면 좋았을텐데,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 문건 만드는데 합의를 봤다, 총리회담 합의문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뭔가 크게 진전된 것 같은 착각을 국민에게 주지 않았느냐? 문제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5차

회담은 그 문건을 합의 안했어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발표해서 그런지 자꾸 메스컴이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던 듯이 얘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일본과 북한하고의 국교 정상화 교섭 또는 미국과의 접촉 이런데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회의 자체는 국민에게 담담하게 발표했으면 좋는데 메스컴이 또 한차례 앞장서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북쪽이 유엔 가입 이후에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라고 예상하던 것이 조금 빛나는 그런 장면을 이 연설문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김덕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 덕 전번 회담은 모처럼만에 열린 회담으로서 상호 탐색의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담의 성과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변화가 있었다는 측하고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는 측하고 그렇게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지금 강선생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소 전술적인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은 조금 색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사실 과거에도 필요 있을 때마다 이런 전술적인 신축성은 북쪽의 태도에서 읽을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이번에 이러한 신축성을 유달리 별다른 뜻이 있는 걸로 해석해도 좋을지는 약간 주저가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번 회담에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소위 북측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변화나 타협을 시도할 경우에 그것을 일단 우리가 수용할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번 회담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그 회담에 기초해서 있게 될 양측의 접촉과정에서 어떤 결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만 되겠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원래 두번째 주제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정리를 위해서 그냥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병준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준 저는 우선 이번 회담의 결과 앞으로 남북협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종전과 다른점은 양측의 입장만 팽팽하게 주장하다가 가능하다면 양측의 공동 이익 분야를 수용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내용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하지만 회담 자체를 계속하는데 대해서는 양측의 공동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측이 이번에 우선 형태에 있어서 불가침을 수용해서 단일 문서로 냈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든 것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저쪽의 제안은 대체로 선언적이고 선전위주인데 우리 것은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된 점도 좋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째로는 역시 쟁점위주로 얘기했고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직업적 회담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아까 강박사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북측이 우리측 국내 내정 간섭 발언을 했을 때 우리는 법적 질서만 얘기하지 말고 북측 인권 사항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핵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핵사찰을 촉구는 했지만 우리측의 논리와 태도가 좀 수세적이지 않았느냐, 핵 문제에 관한 한 우리측 입장이 정리가 안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공세적으로 북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째로는 흡수통일에 대한 북측의 상당한 우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밝혔지만 저쪽에서 흡수통일을 자꾸 이야기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우리와 화해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흡수통일의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역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양성철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는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전술적인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략에서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중

국이 마지막 체제 유지의 하나의 카드라고 할까, 6.25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때 중국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카드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일본과 미국과의 수교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다 하는 전략적인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식의 협상에서 무엇인가 남한에서도 받아낼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탐색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과의 수교가 앞섰는지 남한에서 받아낼 것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인 차원에서 제가 연행북 총리의 연설문을 읽으면서, 또 옛날에도 느꼈습니다마는 그들의 전술이 세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우리말로 붙여 봤는데 하나는 「덮어 씌우기」 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약점이라고 그럴까 체제 취약점 같은 것을 덮어 씌워 가지고 오히려 남쪽을 공격하는, 예를 들면 자기들에게 자유가 부재하다든가 인권이 부재하다든가 이런 것을 덮어 씌우면서 제일 많이 내세우는데 민족 대단결을 강조한다든가 8월 1일의 김일성 연설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번에 조선 반도 비핵지대화 관련 선언 같은 것도 하나의 덮어 씌우기가 아닌가, 말하자면 핵 안전협정에 대한 압력을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덮어 씌우는데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버티어서 최대한 얻어내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 가입 같은 경우가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사실 북한이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려고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25의 침략자 규정을 유엔이 내렸었는데 단독으로 가입하려면 침략자 규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테러국가라고 규정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큰 논란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핵안전협정 문제도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 버티고 남한에서 안달을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핵안전 협정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속 버티다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런 사찰을 허용해서 그런 시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명분이 서고, 없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명분이 서고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최대한

으로 받아낼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세가지 전술에 대해 어떻게 보면 남한이 너무 원칙에 약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안병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북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말하자면 자유 총선을 해야 된다는지 북한 자체의 정치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가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북한만이 1인 1당 독재를 하고 있으나, 연형묵 연설에서는 남한에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했는데 남쪽에서는 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았는가 해서, 좀 거슬리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강조해서 분명히 이쪽에 원칙이 있다. 이쪽에서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이나 원칙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저쪽에 전달이 되어야 되겠고 저쪽에서 덮어 씌우기 하는 전술이나 또는 뒤집어 씌우는 전술에 대해서 좀더 이쪽에서 개발해 가지고 도리어 한술 더 뜨는 그러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유세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세희 먼저 말씀하신 분들과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4차 회담의 평가에 있어서 통일 원칙에서 만든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보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석 즉, 「북한측이 지난 세차례의 회담과는 달리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일 수교와 대미 관계 개선을 조속히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중국의 남북관계 진전 권유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위급 회담에서 외형적 합의를 이룩해야 할 그들의 정책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렇게 분석한 것을 아주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데요, 앞으로 두번째, 세번째 주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는 북한측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자기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하면서 입장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태도인데 비해서 우리측에서는 무엇인가 기본계획이라고 할까요, 기본목표 설정 자체가 아직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원 정책실에서도 92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유엔에도 동시가입하고 그리고 모든 국제 정세라든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남북대화를 좀 서두르는 바람에 필요없이 양보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양보를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불안하게 느낍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몇가지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좀더 굳히고 교류를 실현하는 기간에 접어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상호 접근해서 나중에 정치적인 통합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순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리가 제의한 것에서 보면 나중에 제기해야 될 그런 문제를 미리 제기한 면도 있고 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북쪽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지금 토의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의 장기적인 기본 계획, 물론 이것이 통일원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을 좀더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고위급 회담 뿐만 아니라 다른 회담도, 심지어 정상회담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이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물론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정과 보완이 없는 한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대화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측이 통일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둘째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책의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족통일 연구원의 세미나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고위급 회담 결과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 대일 관계개선 때문에 북한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대화를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나서 가지고 북한하고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유리하나, 이런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 평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하고 앞으로 서울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대한 북한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외형상 신축성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우선 당장은 일본이 북한과 국교수립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북한에게 돈을 주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꼭 우리에게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우리가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대화를 추진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다면 물론 우리가 대통령의 발언을 위시해서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와해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독일식의 통일은 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체제의 와해를 과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와해라는 것은 당장의 와해이지요, 미래에 있어서 와해를 과연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뚜렷한 입장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순되는, 어떤때 보면 금방 북한 체제가 와해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금방 와해되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통일의 목표라고 그럴까, 또 우리 자체의 안의 설정이 우선 급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일단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2010년 정도쯤 가서 통일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계, 그것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각해서 회담에 임하고 또 시기별로 거기에 적합한 안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그 입장은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을 우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정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막말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자체의 목표나 계획을,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정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가서도 그것을 우기고 그리고 서울에서의 고위급회담에서도 그것을 우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정용석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석 전체적으로 7.4남북 공동성명 이후 19년만에 남북한 정부가 합의서를 낸 두번째의 열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7.4성명 합의 당시에 양측이 체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내용적으로 서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상으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합의를 본 결과 큰 내용의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번의 합의서 또한 상호 서둘러 합의한 것인 까닭에 장래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인덕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합의서를 볼 때는 양측이 필요에 따라서 역시 합의서를 무리하게 만들어 냈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남북한 양측은 이번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이라는 것을 의제로 단일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일화라는 것은 양쪽 것을 서로 조정함이 없이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같은 것은 역시 양측이 조정하기 보다는 서로 무엇인가 결과를 빼내야 되겠다라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서라는 것은 노력 끝에 만들었다기 보다는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 합의점을 보여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서두름 속에서 이뤄졌다 그러한 인상을 또한 금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의 실무 회담, 이번에는 실무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대표회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회담이 과연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게 합니다. 이어서 이 평가와 관련되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측은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서 지난 3, 40년동안 북한의 대남 대화의 기본 전략 전술을 조금도 흐뜨리지 않고 백분 반영시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한민족에 대해서는 북한이 통일의 주체세력이고,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대남 교란 책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전략전술이 전부 빠짐없이 이번 회담에 담겨있고 그대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같은 것의 철폐를 요구함으로써 평화애호국 같은 얘기를 했고 또 남한 내부 교란 책동으로서 심지어는 그들의 기초연설에서 전대협 얘기, 박성희 얘기, 보안법 이런 것들을 이번 회담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대남 교란을 계속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남쪽에서 회담에 임했던 태도입니다. 종래 회담보다 상당히 진전된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같은 것은 여론의 방향을 이번 총리회담에서는 민첩하게 흡수해서 반영시켰다 이렇게 평가 됩니다. 예컨대 지난 1, 2, 3차 회담때 우리쪽에서는 북한쪽에 정상회담을 제의 하면서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것을 백분 수용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쑥 집어 넣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북한측에서 정상회담에 관해서 물어보는 듯한 그런 움직임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번째는 할 말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서는 우리들이 꺼려했던 북한의 여러가지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핵사찰 같은 문제들을 끄집어 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도 이번 회담은 한 차원 높아진 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역시 남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 책동,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전 선동으로서의 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비할 때에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었다. 우리는 너무 회담의 내용 진전에 집착했었다. 이것을 북한처럼 우리도 그런쪽으로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 북한이 대남 교란 책동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개방화, 자유화이지요. 북한이 대외 이미지 개선을 한다면 우리도 이미지 개선쪽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개방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꺼냈다가 화를 벌컥내고 일어서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신경을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가령 북한의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감의 뜻”, 이 정도로 마쳤습니다. 북한은 당장 해야 된다. 급선무가 안되면 안된다라고 협박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유감의 뜻”,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남북한 관계라는 것이 그와같은 선전성 차원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너무

약했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한승주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주 대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4차 회담 결과와 5차 회담 전망에 관해서 남쪽의 언론들이 우리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한다. 또 앞으로 더 양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아까 강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르지만 이 회의 자체에서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또 지금 기본 합의서에 합의를 보더라도 그 자체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양에서 한 일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문제도 다른 분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흡수통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저쪽에서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남쪽으로부터 흡수통일을 안한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고 자인하는 것인데 왜 그런 체계적으로, 또 의논 한듯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이번에도 북한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쪽 총리 이하 다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은, 남쪽이 얘기하고 있는 교류협력 거부 구실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이 평양에서도 그랬고 우리쪽에서 나중에 대통령께서도 흡수통일은 안한다 이렇게 확인들을 하셨는데 사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나 하면 흡수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략으로 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흡수통일은 결과이지 전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꽤 낙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조기 통일을 가끔 얘기하

면서 또 흡수통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무슨 다른 통일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통일의 방법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정부쪽에서 어디인가 일관성 없는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 흡수통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자꾸 그 점을 강조할 때 우리가 꼭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가 저쪽에서 흡수통일을 우려하게 그냥 놔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쪽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솔직하지 않게 보이고 사실은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안한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측에서 아까 정용석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쪽 체제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은, 아까 양교수가 「똥어 썩우기」라고 하셨지만 저쪽에서 사실 수세 입장을 공세로 자기네들이 바꾸는 것인 한편, 또 사실은 저쪽에서 이 모든면에 있어서 우리가 방북자를 석방하는 것 같은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15를 기해서 이쪽의 학생들을 초청해 간 것이라든지 이번에 또 5차 회담까지는 임수경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놓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쪽의 의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나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그냥 모른척 하고 놔두는 것 뿐 아니라 한번쯤 깊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달술 선생님께서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달술 저는 평가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북쪽에 다녀온 소감이랄까 보고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것은 두서너가지 되는데 하나는 북한이 지금 무엇인가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해서 논리적 모순이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측은 우리 보고 분단 고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분열주의 세력이다라고 한편에

서 비난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흡수통일, 제도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인지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보고 분단고착화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는 또 그것이 흡수통일이든 협상통일이든 뭐든 간에 통일을 추구하는 현상 타파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는가 어느쪽이나? 이렇게 물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는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서 북한정권 당국자, 소위 고위층 쪽에서는 공식발언을 통해서 잘 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밑에 교양을 받은 인민들 쪽에서는 따로따로 가입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측 기자들을 공격하고 분단 고정화다 이런 논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엔가입도 잘 한 것인지 잘못 한 것인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안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사례를 든다 하면 지금 대 중국관계라든가 대일교섭이라든가 또 소련이 무너져 가지고 경제쪽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이런 타개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남쪽하고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길을 터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두만강 개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남북 간에도 1억불 넘는 간접교역이 사실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표면상의 논리적으로는 정경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정치 군사문제하고 경제문제하고는 불가분이다. 오히려 정치군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 행동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쪽은 분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현상들, 그 외에도 몇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북한쪽이 전체적으로 논리와 행동, 이런 양쪽을 볼 때 상당히 전환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어떤 논리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 이번 평양에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 남조선

혁명을 하려고 추진해 왔던데서 부터 화해로 넘어간다 하면 조금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쪽으로 북쪽의 정책 결정을 하는 상충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너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근거로 든 다하면 아시다시피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한 1년동안 해 왔는데 지난 세차례의 회담은 강영훈 총리께서 했고 이번에 새로 정총리가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을 다시 이번의 새로운 총리가 와서 자세를 다시 잡는 이런 성격이라고 한다 하면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북한측이 과거 세번 회담했던 식으로 계속 불가침선언 우선을 강조하고 또 우리도 교류협력 우선 논리로 대결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평행선을 그었다 라고 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은 고위급 회담 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남쪽의 총리가 바뀌고 또 새로운 자세를 잡고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평행선으로 나간다고 하면 고위급 회담을 계속하는 자체가 상당히 퇴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번에 조그마한 꺾질을 만드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습시다마는 그 꺾질만 겨우 만드는 그런 형태로나마 됐다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도 총리회담을 지속할 필요성을 무엇인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쪽의 논리는 당국 대화도 하고 민간 대화도 한다 이런 논리하에 한쪽으로는 남쪽 정부당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밑으로는 통일전선 해가지고 이렇게 쭉시는 작업을 양수접장으로 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과거처럼 1, 2, 3차 회담 때처럼 남북이 계속 평행선으로 나간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데는 편리할터인데 이제 조금 한 걸음 내디더 가지고 남쪽 정부와 협상을 하는 이런 기초도 하나는 깔아 놓아야 이것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나 해 봤고, 그런 근거로 북쪽의 기초발언문을 자세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시다마는, 북쪽의 첫날 기초발언문을 보면 원래는 저 사람들이 불가침선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기본합의서 하자고 하니깐 이쪽에서도 화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두개의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단 자기네들이 전략을 다 짜놓고 이미 고위층의 결재까지 다 맡아



왔던 것 같습니다. 맡아 봤는데 뒤에 갑자기 하나가 추가된 것이 그런 두개로도 할 수 있고 통합된 단일 합의서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인문이 추가로 겹쳐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지에서는 뜻밖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합의서를 두개로 하든가 아니면 한개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두개로 해도 좋고 한개로 해도 좋고 하는 이런 논리 구성이 북한 친구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따지는 친구들인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 뒤에 갑자기 붙여 놓은 통합안도 자세히 훑어보면 그 내부에도 조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무엇인가 아귀가 안 들어 맞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현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을 뭘하자고 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공동위원회가 남북고위급회담의 하나의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위급회담하고 뚝 떨어져 나와 가지고 하나의 실천기구로 되는 이런 형태의 기구인지 무엇인지 앞뒤가 조화가 잘 안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갑자기 이것을 만들어 붙인것 아니냐, 갑자기 만들어 붙였다고 하면 밑의 실무진은 거기까지 못 따라갔는데 무엇인가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합의서 내용중에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저쪽의 안병수 대변인은 7가지인가 8가지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서너가지는 분명히 양보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이 그동안 완강하게 거부해 왔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한 조문을 집어 넣어 놨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북쪽을 개방시키고 북쪽 체제를 와해시키는, 남쪽이 들고 덤비는 하나의 칼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뜻밖이라고 생각했고,

둘째는 파괴전복 활동을 하지 않겠다 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괴 전복 활동을, 과거 남북간에 실제로 정식으로 정규군이 맞붙어 싸움하는 것은 한미안보조약도 있고, 세

계대전으로 발전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골치 아픈 것이 케릴라 침투라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걱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집어 넣었다고 하는 문제라든가 또 저쪽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뺐다고 하는 항목인데 통일에 역행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쪽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던 통일전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던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철회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양보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껍데기만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의미만은 아니지 않느냐, 다소나마 자기네 측의 성의 표시라고나 할까 이런 것을 실제 조문상으로도 약간은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이상하다고 새롭게 느꼈던 것은 저는 북한측이나 우리측이나 간에 대체적으로 회담대표단이 나가서 어떤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쌍방간의 수석대표, 총리면 총리, 어쨌든 수석대표와 대변인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이 과거의 전례였습니다. 우리측도 그렇게 하고 북측도 그렇게 해 온 것이 관례이었는데 이번에 뜻밖에 김정우라는 대외경제사업부 그 친구가 별도로 남한측 기자와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뜻밖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체로 과거 북한의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를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여튼 제 자신이 북한의 전체를 캐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4차 회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술 선생께서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일곱분들이 평가한 것을 종합 하면 큰 실수없이 치렀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성공적이고 또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 정부간의 회담을 정착시킨다거나 고위급 회담을 지속시킨 점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예를 들면 우리 자세가 아직도 수세적이고 특히 인권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

론하지 않은 것은 어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대개 이 정도의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주제가 들인데 이번에 주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취할 태도에 대한 우리의 예견인데 이것은 자유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발언해 주는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 약 2, 30분 토론한 다음 휴식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인 5차회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진행해 볼까 합니다. 두번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십시오.

**강인덕** 우선 제가 이 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태도는 대미, 대일관계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느냐. 사실 여기서 발언한 것 가운데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테러문제를 뺀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대답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미국의 조건의 하나니까요, 경제 문제도 저는 합작회사와 문제가 있으니 일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보고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묻는데요 15페이지에 「한편 북한측은 합의서 내용에 있어서 전문에 쌍방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님을 인정하자는 표현을 삽입하고 우리측 제1조의 체제 존중을 사상과 제도의 존중으로 대처하자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제시한 제2조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개방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북쪽이 한 나라, 한 민족 기본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 회** 질문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대화사무국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병준** 5차회담에서 예상되는 북측 태도인데 북측이 지금 어느정도로 우리측과 회담에서 어떤 타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 태세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기초발언문을 읽고서는 참 판단하기 힘들다. 평소에 제 생각에는 남쪽과 어떤 회담을 해서 무언가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는 일본과 국교정상화 하는 것도 어렵다. 또 미국과 접촉하는 것도 어렵다. 또 경제협력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든 남쪽과 관계개선을 하는 척은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왜 남쪽과 어떤 타결을 하지 않느냐? 저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 남쪽과 기본합의서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의 주체사상 등 그것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니까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행동과 이론과의 괴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에 대한 자기네들의 준비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고 들쭉는 정말 차제에 남쪽과 완전히 합의해 가지고 교류를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흡수통일이라고 하는데 대한 우려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오는 여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지금 회담을 해 가면서 준비할 시간을 벌면서 자신감을 찾고 그럴때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지 않겠느냐 그게 저의 생각인데 사실 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주**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5차회담에서 북한측이 좀더 어떤 합의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이 되고 그러면 우리측에 선거도 있고 팀스피리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참동안은 고위급회담이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다른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본과 다른 서방측 나라들과 관계를 더 개선하고 수립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대화의 진전이고 또 하나는 핵사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미국이 남한에서 핵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핵사찰,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참동안은 사찰자체를 실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는 명분을 찾는 것도 북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5차회담에서 지금 합의서 그러니까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뿐만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문제, 저쪽에서 제안한 9개 조항을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은 3개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측에서 그것을 양보한다면 같은 합의서나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비핵선언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도 핵안전협정을 수락하는 명분이 생기고 자기네들이 핵안전협정을 수락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또 그것에 직접적인 차질이 없을 수 있고 다만 그 두가지를 함으로써 일본과의 수교라든가 다른 목적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정말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선언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5차회담에서 어떤 협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앞으로 선언이 가능한 것을 내다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쪽에서도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한두분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덕 저는 이제 5차 회담을 할 때 지켜야 할 우리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금년 7월에 부시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발표한 것 가운데 기본 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체제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두번째는 통일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이것은 원문을 보지 못하고 국정보고서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세째는 미국이 통일과정, 통일후 주변국가 가운데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을 견제해 줘야 된다. 이것이 7월달에 통일문제에 관해서 부시대통령과 합의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문서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 세가지인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신뢰구축을 통한 군축,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이 세가지인데, 세가지 가운데 세번째는 지금 저쪽에서 이것을 흡수통일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것은 뻔한 것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합의문 작성에 화해, 불가침 그 다음에 교류협력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화해 부분이라는 말을 잘못 만들면 북측에서 처음부터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이용해 먹은 식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화해 문제로서 구체적인 예를 듭시다. 경제 회담때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북측에서 첫째가 경제회담은 통일 이념에 부합돼야 된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둘째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회담을 하려면 상호 존중해야 된다.

세째는 상호 이익이 돼야 된다.

이것이 경제회담의 이유라고 했는데 첫째, 둘째 문제 가지고 경제회담을 깨버렸습니다. 팀스 피리트 이것은 화해하기 위해 상호 존중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절면

걸리게 된다. 따라서 화해 부분을 얘기할 때 지금 교류와 협력문제가 맨뒤로 갔는데 이것은 한편 우리가 원하는 체제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의 문서는 맨 처음부터 만들어 가니까 순서가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을 대표급회담에서 주의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회담에, 요전에는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에 안 나올 것이냐, 그동안에 대표회담은 유엔가입 논의하자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는 탐색전으로 끝내지, 무엇때문에 거기에서 합의서 같은 것은 만들어 냈느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모를까 상당히 시간을 끈다면 이 회담이 되는 것 같이 만들었을 때 우리 국가의 이익과 우리의 통일정책의 어떤 점에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5차회담을 진전시킬 이유가 있을 것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런 공개적인 회담에서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왜 추출해 내지 못하는 것이냐? 지금 선전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선전전이 됐는데 그걸 보장해 주는 문서가 돼야 되겠느냐, 저는 언제나 남북대화는 두가지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맨처음 부터 생각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장내전략, 장외전략 두가지 전략을 펴지 않으면 남북대화에서 오히려 장내에서 대표끼리 떠드는 것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의미에서 장외가 더 중요하다. 국민 자신이 모르니까 그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회에서 인권문제를 논하라 했을 때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했는데 마치 회담을 깨면 큰일이나 나는 것 같이 그런 태도로 임하는 그런 점은 앞으로 특히 대표급 회담에서는 가차없이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 회 고답습니다. 북측태도를 예상하고 우리 태도에 대한 비판이 되었습니다. 김덕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 덕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5차회담에 임할 북측의 태도인데요. 지금 몇분께서 상당히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북측사정이 상당히 급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5차 회담이 또다른 탐색용 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탐색이니까 우선 특히 일본의 태도, 일

본이 물론 미국으로 부터 행사찰 그것을 연계시키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어느정도 순응할 것이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대북관계를 어떤 조건으로 촉진시키는 방안을 테스트하는 그런 탐색의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한국정부의 태도를 최종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현 정부의 집권 1년 기간을 남겨두고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급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문건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국 정부내에서 두개의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탐지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뜻하지 않은 양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탐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민간 여론을 탐색하는 기회도 될 겁니다. 일단 단일 문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통점만 가지고 자꾸 강조하고 저쪽은 하지는 쪽으로 이쪽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합의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딱 양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론앞에 하자고 하는 북측 주장이나 입장이 거부조건 없이는 못하겠다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양극적으로 내보이면서 한국여론의 분열을 조장하는 효과로 탐색할 그런 세가지 탐색의 목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태대로 봐서 아무리 저쪽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12월 안에 완전히 합의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도 그것을 역시 다른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깊이있는 탐색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한층 더 수세로 몰고 한국의 민간 여론을 한층 더 분열로 몰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태도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양보를, 일본으로 하여금 대북한 수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가 하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오히려 어떤 성과가 있다면 6차 이후에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3주제로 넘어가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5차회담이 서울에서, 11월 7일부터 판문점에서 있게 될 실무회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을 고려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없이 자유롭게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회담에 대하여 차관님께서 쉬는 시간에 제안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시

켜서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일본과 북한의 수교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인데 우리는 북한측에다가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지만 일본에게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붙여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진일보한 합의를 보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론하셔서 종합적으로 5차 회담의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유세희** 우선 차관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측에서도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런 얘기들을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을 접촉해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떠 본 것으로서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등소평이나 최고지도자 말고 밑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중국이 핵개발에 기술지원 한적도 없고 소련도 물론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북한이 핵사찰에 응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이 자기내의 기술수준이 너무나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노정되는 것을 원치않는 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핵사찰을 북한이 받지 않아도 남쪽의 태도를 봐서 남북한 관계가 완화되는 것 같으면 북한하고 무엇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일본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면에 재미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북한판 NCND정책입니다. 자기네들이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지도 않고 안하겠다고도 안하고 그러나 언젠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하는 것을 북한이 카드로 써 보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북한이 지금 다른 카드가 별로 없어요. 결국 핵의 카드인데 이 핵은 아까 한선생께서 핵사찰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중국도 과연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반대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체제중의 하나인데 전부 뺄뺄 돌려서 포위를 당하고 김일성이 “우리의 자위를 위해서 이것은 가져야 된다. 우리는 다른 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우길 경우에 중국이 그것을 무작정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구나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쓰겠다든 것보다는 하나의 방어용이므로, 이북 체제가 살아 남기 위한 방편으로 쓰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중국이 못하게만 우길 수 없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흡수통일 문제인데요. 이것도 우리 상황이 독일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도 현 체제가 루마니아 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느냐, 흡수통일이 된다면 내부에서 범국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반체제 군부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서 현체제가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흡수통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군부쿠데타가 된다고 그래도 백기를 들고 이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보면 같은 체제내에서도 지역감정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남북대결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체제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제가 볼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대립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체제의 일부 군부가 쿠데타를 했다고 그레가지고 백기를 들고 우리한테 오겠느냐, 그리고 북한이 작기 때문에 통제능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작는데 왜 통제능력이 없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해온, 조직적으로 통제를 해온 그런 것 때문에 흡수통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친구들이 흡수통일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자기네들이 우리쪽의 제의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변명의 구실로 흡수통일의 얘기를 쓰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판단이 잘 안 서는 것이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가 빨라지는 것

이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어느쪽이냐,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 저로서는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관계가 보다 더 우리쪽에 유리한 식으로 진전되기 전에 북한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북한카드를 쓸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소위 동북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그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정책을,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영든 일단은 이번 5차회담에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 교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개방하는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핵사찰 문제도 그렇기는 한데 우선 핵사찰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람교류하는 문제하고 언론매체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것을 당장 하자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체제 자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김일성체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양보할 수 없는 지금 북한체제의 성격으로 봐서 현체제의 동요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오케이 하기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람교류하는 문제하고 언론매체 개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저히 자기네들이 응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조항을 우리가 이번 제의에서 우리 국민의 감정도 있고 해서 빼기는 어렵고 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 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당장 하자고는 말고, 그런식으로 할 수 있고 만일에 이번 회담을 우리가 깨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기는 것이죠. 저는 역시 강경론자 비슷하게 됐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의 의도가 자기네의 변화는 적극적으로 회피하면서 뭔가 융통성을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전술상의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경하게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양성철** 우선 고위급회담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일같은 경우에 총리회담을 한 것이 70년인데 19년 걸려서 통일이 됐으니까 자칫 어떤 인상을 주느냐, 북쪽에서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 전략전술상 서두르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남한에서는 6공이 서두르는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사실 통일문제는 물론 정권차원에서 집행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것은 국가 민족적인 대사다 하는 분명한 신념에서 해야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엔에도 자의든 타의든 가입을 했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양보해서는 안 될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핵사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북한이 지금 기폭이나 서두르고 있는 대미, 대일협상에 있어서 한국과 공동보조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핵사찰 문제를, 북한에서 이번에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까 마는 이 핵사찰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과연 변하고 있는가, 특히 군사문제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고서는 우리가 신뢰구축이나 긴장완화나 군축 같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이 「뒤집어 씌우기 전략」이라든지 또는 「덮어 씌우기 전략」이라든지 또는 「끝까지 버티기 전략」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말려 들어가서는, 아까 장외전략에서 지고 장내전략에서 이겼다는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북한의 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수에 대응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차원문제라든지 분명히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내, 장외전략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서는 공식자료와 비공식자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북한이 하는 얘기들이 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하자”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전략 특히 핵전문가들이 분명히 비핵지대화가 갖고 있는 시대의 역행성이라고 그럴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있는 전략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북남불가침에 관한 것 같은 것도 그것이 유엔에 이미 가입이 돼있는데, 그것을 약간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총리 얘기에서,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가가 침략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유엔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실무접촉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쪽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과 이론적인 모든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거론되는 것중의 하나가 방북인사, 전대협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통계라든지 또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서 결코 전 민족을 대변하는 것처럼 북한이 무슨 민족 대단결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통계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팀스피리트 같은 것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ISS자료도 있고 SIPRI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북한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러 이러한 사실이 이런 것인데 전방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무슨 얘기냐 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철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6.25배경 특히 이제 소련에서 자료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6.25남침전에 미군이 다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 온 배경이라든지 이제까지 미군이 30만에서 10만, 6만, 4만 이제 3만선으로가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자료 준비가 없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북한으로부터의 간첩침투라든지 테러행위라든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지

고 이쪽에서 충분히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또 개정되어야 할 요인도 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옛날식으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국가보안법은 우리 나름대로 개정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것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까 장외, 장내 얘기가 나왔습시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핵사찰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이나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 문제를 우리가 결코 등한시하여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석** 지금부터가 중요한 핵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우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5차 본회담, 실무회담 등에서 다루어질 문제, 또 사무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송차관님이 제기한 핵사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실무회담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효력조항 이런식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에서는 북한측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단어, 화해를 북한측이 불가침 앞에 내놓았다 그래서 상당한 안전장치쪽으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명분상에서 저희들이 얻어냈습시다마는 실제상에서는 저희들이 북한한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문에서 볼 때 서문은 원칙을 얘기한 것입니다. '7.4공동성명 정신을 받들어서' 등 서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화해라는 곳에서는 화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해라는 개념을 교류로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도 화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흡수통합 문제거든요. 아까 한박사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흡수통일 문제인데 이것은 북한의 개방입니다. 북한의 개방은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핵은 4번째 대목의 교류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문 첫째 내용 두번째 다룰 문제 화해에서는 북한의 교류를 촉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세번째로 불가침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간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적에 먼저 다루는 문제가 교류보다 불가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류를 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종래주장을 그대로 거의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화해를 앞에다 댔는데 결국은 속은 것이예요. 화해가지고는 별다른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불가침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류협력보다도, 이때에 우리는 핵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도 거론할수가 있고 비핵지대화, 그러나 그때 들어가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한국 여론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왜 미·일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왜 강요를 못하느냐고 상당히 얻어 맞을 또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총리께서 또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계제에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사찰이라는 것이 남북한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슬쩍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언론이라든가 국내 언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남북관계에서 지금 급선무는 핵이라는 것을 후에 이렇게 해주면 미·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나아지고 북한에 경고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회담때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강하게 내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총리나 대통령위치에서 강하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급선무라는 얘기를 표시해주면 앞으로 이것을 만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사찰에 대한 대안책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4차회담때 연형묵 총리의 기조연설을 읽었을 때 전체 내용의 4분의 1을 핵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앞으로 실무회담과 5차 본회담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은 바에 의할 것같으면 북한은 비핵화와 연결시키지 않겠다. 안병수도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은 이 실무회담에서도 계속해서 비핵화를 꼬집어 낼 것이고 입북자 석방을 주장할 것이고, 이런 통일에 장애되는 문제, 아까 김달술선생께서도 거기서 많이 양보한듯 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기할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총선거때 이 사람들은 비핵지대화를 선거이슈로 깔아 주기 위해서 야당쪽에 이슈로 깔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밀입북자 석방문제도 야당의 이슈로, 보안법 문제도 야당의 이슈로 깔기 위해서 이번 총리회담 때 실무거나 본회담이거나 문제로서 제기하고 나설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 역시 강한 문제점으로써 앞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도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 주민의 제한생활을 실무대표들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철저하게 저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치고 나서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북한쪽이 뭔가 필요성에 이끌려가지고 적극 합의점을 찾으려고 나선다 했는데 저는 그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 것은 역시 명칭에서 합의점, 지난번 한 것 그 정도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더이상 구체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 저사람들이 총리회담에서 가장 바라는 목표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합의점에서 나갈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교류협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사람들이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먹고 먹히우느냐 식으로 김일성이 금년 신년사에서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까지 자기네들이 밀리는데 왜 들어 갑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것을 또 다른 자기들의 선전 자료로 삼으려면 역시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해철수, 입북인사 석방, 보안법 이런 것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는 세번째 그와같은 의견의 연유로서는 이번에 합의서를 채택 했어요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시큰둥하게 생각을 합니다. 합의서가 분명히 채택됐는데.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경제원조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지난번에 인도적인 경제교류는 하지만 그밖에는 안 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볼때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별 볼일이 없구나 그렇다면 합의서 더이상 나가야 별볼일 없지 않느냐, 내년 선거고, 그렇다고 일본도 움직이지 않고 이래서 오히려 지난번에는 떠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떠 보니까 별 볼일없더라 하고 오히려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는 이번에 지난번에 잘 나왔다, 뭔가 딸린다, 또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일본과 수교하려고 그런다, 미국의 돈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유엔가입과 동시에 하려고 한다, 이러한 낙관적인 것보다는 역시 이제 해보았다는데 저 사람들이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준비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준** 구체적으로 5차회담때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 우리의 5차회담 추진전략인데 저로서는 뽕족한 전략은 없고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5차 회담전에 대표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저쪽의 안병수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5차회담 이전에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본회담은 아무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이제 대표회담이 본회담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남북협상의 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제로는 세사람이 나가지만 어떤면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회담에서 꼭 성취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요. 아까 그 일곱가지 그것을 저쪽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좀더 명문화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 것을, 물론 법률과 이론에 의하면 현존하는 휴전체제와 평화체제는 같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휴전체제를 중단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간에 뭔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과 하지 말고 우리와 하자, 이것을 저사람들이 수용하면 그때는 기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어떤 합의를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NCND정책을 고수한다면 남쪽에서 우리도 핵을 안 갖겠다, 없다, 미국이 핵을 갖고 나간다 이런 소리를 못하니까 이것이 큰 문제예요. NCND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핵사찰을 받지 않는 한 남북간에 합의는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비공개적으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핵사찰을 하기전에 남북간의 합의서를 우리가 조인한다는 것이 나는 외교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둘째 순위는 역시 저는 교류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류 가운데 이산가족이라든지 사람들이 오간다든지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군사문제에서 신뢰구축문제 특히 투명성 이것없이 저 사람들이 군축만 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연락사무소라든지 아까 유교수도 그랬는데 라디오, TV를 완전히 개방하자 이것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거예요. 그러나 강조는 하되 그것을 맨앞에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든지 팀스피리트 이런식으로 순위를 정하자.

둘째로 앞으로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연계 개념을 도입하자. 무슨 말이나 하면 너희들이 이것 안 들어 주면 이것 못한다 하는 어떤 연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래가 송한호차관께서 하실때 정치 군사와 교류를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의제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군사문제와 교류를 연계한다든지 또 실제로 회담전략에 있

어서 사람들은 우선 회담에서 발표해 가지고 회담이 되는 것같은 형식에 자꾸 치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내용에 있어서 너희들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에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든지 이런 연계를 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군축문제와 경제협력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경제협력을 무슨 선심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경제협력이면 뭐든 좋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축이나 평화장치에 양보하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곤란하다 하는식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컨대 저쪽에서 말하는 불가침 선언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외구축 받아들여 주면 너희들의 불가침선언 받아주겠다. 이런 연계를 해가지고 역시 대표회담이 비공개회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할 이야기 다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홍보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목적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우리의 전제조건이라든지 링크를 만들고 이것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핵안전협정 조인과 핵포기를 안 하는 한 국교정상화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북이 핵안전협정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이 국교정상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중국도 제가 볼때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일관성을 지키자. 일관성을 지키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서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조급하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 주면 이 다음에 합의서도 되고 남북한간에 돌파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기다리겠다. 너희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세,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사 회 고답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저는 발언할 것이 없는데 두가지만 제가 중간에 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으로 답을 내용중에 화해, 불가침, 교류 이런 순서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고, 불가침협정도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해 영역의 핵심은 평화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불가침하고 연결이 됩니다. 화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과거의 청산입니다. 불가침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현 단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입니다. 이 전쟁상태를 해소하자는 것이 화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간의 적대관계의 해소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에서 남북관계가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특별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둘 다 유엔 가맹국이니까 어디까지나 주권국가간의 관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동일과 연결할 때는 특수관계이지만 이러한 불가침이나 평화협정을 논할 때는 사실상의 주권국가라는 인식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조금전에 안선생께서 우리가 내세워야 할 여러가지 목표중에서 말하자면 중요도에 서열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도 안선생하고 똑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협정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남북한간에 적대관계의 해소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양쪽이 합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DPRK간에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양쪽에서 합의 보지 않는 한 그 뒤의 약속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불가침도 바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앞으로 불가침을 약속한 당사자가 정해지니까 거기서 비로소 얘기되는 것

이지 남쪽의 어떤 단체와 북한의 어떤 단체간에 불가침 약속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해항목이고 이것은 다른 항목의 논의에 반드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휴전협정 당사자문제, 그것을 평화협정 전환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기존의 휴전협정과 연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새로운 협정, 평화협정이든지 무슨 협정이든지간에 체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앞의 것이 무효화 되게끔 만들면 그만이지 그것을 직접 연결해서 하나 하나를 1:1로 대입해 가지고 전환한다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해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거론했습니다.

**강인덕** 저는 5차회담 보다 앞서서 대표회담이 시작되면 송차관께서 대표로 나갈텐데 이것이 큰 걱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문이 잘못 됐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시다마는 4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판문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문안조정을 위한 대표접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당장 합의문 문서작성하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북쪽의 회담 전술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장 합의문 내용 만드는데 들어 갈 것이냐 안 들어 갈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생각이 돼야 된다.

저는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만들자, 이렇게 우선 제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껏 저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돼도 서문, 이것이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원칙과 같은 것으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부터 지금 얘기한 모든 문제는 남북한간에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원칙하에 이것한다. 이렇게 서문에서 명백히 해야 되겠다. 불가침 안 가도 이것만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것이죠. 그다음에 화해문제입니다. 서문은 원칙 문제 일테니까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핵심은 어떠한 문제든 평화협정이건 뭐든 이제는 남북한간에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해결한다. 이런 것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화해의 내용입니다. 화해의 내용 가운데 북쪽에서 낸 것을 보니까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파괴행위, 군축문제 뭐 이것도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실천적인 방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서문만이라도 합의를 해서 5차회담에서 서문까지는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전체가 다 합의될 때 합의되는 것이지 어느 항목 합의됐다고 해서 합의되는 것 여기에는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물적교류가 맨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합의 안하고 앞에 부분 1항과 2항까지는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대표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합시다 이런식으로 얘기할 때 거기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인 것은 인적 물적 교류이니까. 이러니까 순서가 지금 큰 문제고 앞에 서문, 화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전체가 합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기본정신이 반드시 남북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미국과 어떤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좋겠고, 핵문제는 우리가 낸 기본합의서 초안에는 없습니다. 발언문에는 있는데 총리회담의 기본합의서 문안에는 핵사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북쪽에서 내놓은 제3조가 문제입니다. 핵우산 반대, 이것 핵우산 반대에 오케이 한다면 이것은 몽땅 다 끝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인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NCND정책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공중핵까지 나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명백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회담이 깨지건 말건 북쪽의 핵사찰 문제는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더구나 제3조 이것 가지고 우리한테 핵우산 운운하게 되면 이것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좋겠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술** 그 합의서 문안 제4항이 이렇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은 당장 문안정리로 들어 가는 것으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4항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양해가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양해가 되었느냐 하면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우선 우리측에서는 중요한 항목이 반드시

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에 대한 개념을 먼저 토의한다. 그래서 항목을 설정한다. 그것이 우선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러한 문안정리에 가 가 거 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양해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저쪽에서는 그런것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한 중요 항목에 대한 개념토의를 먼저 선행시켜서 그것이 합의되고 그 개념이 쌍방간에 서로 이해가 되고 이런 개념정리가 끝난 다음에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 가 거 거 따진다 라는 우리 대표접촉상의 기술적인 것이 남북간에 양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까 핵우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순서상 서문, 화해, 불가침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잘못 하면 서문만 먼저 합의된다 이렇게 나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부다 일괄 타결하고 동시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쌍방간의 원칙이므로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결합된 것이며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타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만 먼저 합의했다고 해서 서문 합의했다고 발표가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덕** 발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서문을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발표되는 것이죠.

**김달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남북간의 양해가 이루어진 부분을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세번째 핵문제인데 핵우산 문제는 지난번 새로 돌출적으로 나온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했던 부분인데 사실 핵우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령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핵사찰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그렇다면 한반도의 핵에 관한 문제를 남북간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지대화 선언이 안고 있는 것은 아예 거론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김 덕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략개발이니까 대체적인 전략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5차회담을 남북간에 결론을 도출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국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정부가 끌고 나가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통일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대 북한관계에서 북한의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탐색의 의도를 역 이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성급한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이 이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꼭 성급한 결론을 내릴 경우는 그것이 바람직한 결론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국내 정치나 대북한관계에서 볼때도 그렇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전략으로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저쪽에 비판할 구실을 줄만한 약점을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출하는 태도를 기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운운은 아직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화정착 또는 남북 평화공존 관계의 안정화라는 것인데 그런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남겨놓고 저쪽에서 남북간에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도록 오히려 유인하는, 그래서 우리쪽에서 그것이 타당하면 받아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 들이는 여유를 갖도록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식으로 회담을 유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이미 우리쪽에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너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흡수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에서 되도록이면 약점이 잡힐만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선전의 ABC인데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회담에서는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 안 하려면 우리의 원칙을 당당하게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양면적인 전술을 쓸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는 의연하게 원칙을 명시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다른쪽으로는 앞으로의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유인하는 그런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수단으로 경제적인 봉쇄조치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하는 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방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하거나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인상을 북한쪽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쌀을 주었는데 돈도 못 받았고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태도없이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되겠다.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의 기초위에서 경제협력을 다른 것하고 연계시켜서 긴밀하고 일관성있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강조할 것은 남북관계 운영에 대한 정부의 보다 대국적인 청사진이라 할까 계획같은 것이 국민들 눈앞에 드러나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너무 성과에 대해서 조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관계 운영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정권이 해야 될일이고 하는 대국적인 청사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민들 눈앞에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장하려고 한다는 현 정부의 억울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승주 처음에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토의가 안 된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합의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합의한다는 자체가 지금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면목이 서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볼때는 핵사찰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끈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은 최소한의 제스처로서 일본에게 수교하는 명분을 주고 또 자기네들 먼저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할텐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핵안전협정에 조인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 와서 우리가 합의서에 조인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초안을 상당 부분 저쪽에서 수용한다고 그럴때는 사실 안 한다고 그럴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인데 우리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핵보장, 비핵지대화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생



각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 내놓은 비핵지대화  
관한 선언 이러한 것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의 딜레마를 도와 줄 수 있  
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언에 예를 들어서 핵우산 조항 같은 것을 빼고 미국  
핵무기에 대한 언급도 빼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핵보장이라든가 비핵지대화 선언을  
한다는 것과 일치되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안에 남북이 핵안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충  
실히 이행한다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경우에 그것을 저쪽이 수락하는 경우에 우리가 나머지  
기본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쪽에서 내놓았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이 우리의 딜레마  
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관계 운영 전체에 있어  
서 대화에 관련이 됩니까. 지금 합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합의까지는 되  
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축문제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한간에 군축에 상응하는 일방적 조치들  
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가 대대적인 핵감축 계  
획을 선언했고 그리고 열흘 뒤 고르바초프가 핵감축 선언을 했고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남북  
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군축문제라든지 핵문제는 그런 방식의 합의를 바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라디오, TV 이런 것을 개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 라디오, TV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쪽이 우리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저쪽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장관계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든지 철폐하는 조건으로 상  
대방의 사회안전법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  
는 이유가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합의서에 그  
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  
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달술 지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점이 남북

협상당사자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북측이 합의가 아니고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서로 양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는, 가령 북쪽에서 남북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어려운 난점이 있고 그런 쌍방간의 문제를 쌍방간에 어떤 타협을 보자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런 조치를 취해도 사실 대표단의 입장에서 접한다고 하면 북한이 접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학자님들한테 비판받는 것이 제일 겁나고 국민여론에 두들겨 맞는 것이 제일 겁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 회 남북한간의 당사자 문제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사항입니다.

양성철 미소간에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자는 데는 합의 없이는 조금 불가능하죠.

김달술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북 쌍방간의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공동위원회가 서로 합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현재의 휴전협정을 과거 3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문화되고 실제 있는 부분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다음에 DMZ가 있는데 그러한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서 남북간에 새로 설치될 군사공동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운영·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형태로 들어가는데도 다만 명분상으로는 휴전협정이라는 그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가서 실질적 군사공동위원회로 사실상 대치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사 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간의 합의가 아니고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휴전협정도 가령 중국 같은 것도 인민지원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장력이지 싸인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정 이라는 것도 그런 성격의 것이죠.

앞으로 남북간에는 주권국가간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쓸 것 없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부터는 남북간에는 사실상 주권국가인 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원칙만 정해놓으면 그 전제하에서 평화협정, 불가침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원용해서 쓸 것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김 덕 너무 선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 거기에 너무 신경쓸 것 없다. 사실상 그런 관계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적으로 명시화하려고, 선언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김달술 그런뜻에서 남북간의 평화조약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남북간의 쌍방 총리간의 합의문서를 만드는데 그 합의문서의 내용이 하나는 화해이고 하나는 불가침이고 교류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 합의문서 자체가 일종의 강화조약 비슷하고 평화조약 비슷한 이런 성격으로 볼 수 있죠.

안병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컨대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 합의가 없이 조인을 해버리면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 회 그러면 대충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워크샷은 마치겠습니다.

## II. 「南北基本合意書」採擇 以後의 南北對話 展望

### 目 次

- 合意書 採擇의 評價와 意義
- 合意書 採擇以後 北韓의 政策變化 展望
  - 核査察 問題
  - 南北對話 問題
  - 美·日 등 對西方 關係改善 問題
- 우리의 向後 政策推進 方向
  - 核査察 問題
  - 南北對話 推進 方向

# 1. 第1次 討論會

- 日時：1991年 12月 19日
- 場所：大韓商工會議所 會議室

## 〈討 論 者〉

- 司 會：具宗書(中央日報 論說委員)
- 討 論：都俊鎬(朝鮮日報 北韓部長)  
徐時柱(聯合通信 北韓部長)  
宋道均(文化放送 北韓部長)  
呂永茂(東亞日報 統一問題研究所長)  
張秀根(서울新聞 北韓部長)

사 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중앙일보 구종서입니다.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어제는 대통령이 핵부재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수년간 간헐적으로 뒤통거리는 걸음마 상태로 불안하게 계속되어 온 남북대화가 하나의 결실을 보게 되었고 또한 실천적 단계에 들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합의서 채택이나 핵부재선언은 우리의 분단사에서 넓게는 우리 전체 민족사에서 중요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창조해낸 금년 한해를 열흘 남짓 남겨놓고 남북대화의 정부측 주무기관인 대화사무국 주관하에 남북문제를 전담하는 언론측 주무부서인 각 신문, 방송의 북한부장님들 그리고 통일문제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올 한 해의 남북관계를 총 점검하고 향후의 남북대화나 남북관계의 전개양상을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크게 나누어 세부분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합의서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이 남북합의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합의서의 채택이후에 예상되는 북한의 정책 변화에 관한 전망입니다.

이 전망은 너무나 광범하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세가지로 모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핵사찰문제, 다음은 남북대화에 관한 문제, 그리고 미·일 등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세번째, 이같은 평가와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향후 우리의 정책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토론의 능률을 위해서 핵심질 문제와 남북대화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같은 토론회는 지금 두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북문제를 심도있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두개의 지식인 집단을 통해서 정책당국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도움을 청하는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언론팀은 학자팀에게 지지 않게 유익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서 우리 정책당국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개의 주제에 따라서 진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토론자들에게서 그 주제의 범위를 지켜서 앞뒤가 뒤섞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더 능률적인 토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토론은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 다섯분이 골고루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상 그러한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서 채택의 평가와 의미, 두번째는 채택이후의 북한의 정책전망, 세번째는 우리의 정책추진, 이래야 체계가 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첫번째 주제는 『합의서 채택의 평가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이미 널리 보도되어 있고 배부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미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역시 소개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도준호 부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준호 분단 46년간 실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가 없다가 이번 5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남북대화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대해서 이번 합의서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당국이 46년만에 공식적인 정부당국자가 문건을 교환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가 과연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향해온 통일의 방향에 합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당국에서의 설명은 특히 불가침 분야에 대해서 북한이 대폭 양보를 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류쪽에는 오히려 북한쪽에 양보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는 대화의 틀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 해서 인적, 물적교류를 우리는 대화의 기본적인 하나의 방침으로 이제까지 정해 왔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번 합의서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됐느냐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물론 문건상으로는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실현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15조에서 당초 우리안은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을 비롯하여』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개방에 우리의 중점이 두어져 있었는데 이 개방이라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가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문건이 정리됐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의도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의도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나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까만 우선 두가지만, 그 다음에 18조에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한다』는 말을 우리가 『즉각 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실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개방의 문호를 막기 위해 『즉각 실시』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느냐, 사실 적십자회담이 71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이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렸고 이런 문건은 적십자회담에서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북한쪽에서 자기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특히 남북불가침에 대해서 많은 북한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안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12조 경우 같은데 『남북의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의 정보 교환문제』 이런식으로 해서 대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쪽의 요구에 의해서 『통제』문제가 오히려 불가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통제』라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쪽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고 이미 팀스터리트를 중지하라고 통제조항을 들어서 노동신문 사설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제 내외통신에 볼 것 같으면 미국의 공중정찰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트집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침 부분에 우리 안이 반영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의도하는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문제는 더 확대해석을 하고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주한미군철수 문제까지도 북한쪽에서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 문건이 그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때 오히려 북한측이 의도하는대로, 이니셔티브를 북한측이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첫번째 문제 토론은 3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말은 반복되지 않는 범위로 축소해 주시는 것이 더욱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시주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시주 저는 합의서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 마지막에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에 있는 합의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대로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 먼저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합의서 형식면에 있어서 7.4공동성명보다도 상당한 모양을 갖췄다, 다시 말해서 7.4공동성명은 비공개리에 통치권자의 밀사라는 형식으로 먼저 다녀 온 다음에 남북한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이 되었고, 이번의 남북합의서는 적어도 남북간에 각기 50명이라는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공개리에 진행되어 합의서가 채택됐다 하는 면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보고 나중에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구속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내용면에 들어가서 7.4공동성명이 선언적 의미로 그쳤다고 하면 이번에는 다소 선언적 의미도 1, 2, 3, 4, 5, 6조항까지는 있지만 그 뒤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실천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 문건 자체로 봐서 상당히 의의를 부여해도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남북이 공히 주도를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단국이나 이런데서 외세에 의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번 남북의 대화도 외세가 작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합의서를 도출해내는데까지는 남북의 대표단의 주도로 끌어낸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동서독의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협약형식으로 돼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협약형식이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 보다는 조금 구속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합의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가 나온 배경은 한마디로 북한의 다급해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됐다. 다만 남쪽에도 전연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백분 활용해서 대표단의 노고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북한이 과연 이 합의서의 문건 자체를 문건으로 그칠 그런 가능성이 60%이상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하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2월 18일부터 열릴 6차 고위급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사인한 문본이 교환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거기서부터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설치될 운영기구를 보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판문점 연락사무소 같은 것이 세워지려면 적어도 1개월, 3개월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실천에 들어갈때는 북한이 지연 작전을 쓰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대표단이 앞으로 실천화,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합의서 하나를 쥐고 대미·일 관계개선에 카드를 얻었다고 의기양양하기 때문에 이 합의서 자체를 얻은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김일성으로 볼 때는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날 저녁에 5시반에 열차로 가서 9시반에 주석궁까지 들어가서 대표단을 치하하는 김일성의 태도로 봐서 상당히 자기들이 의도한대로 합의서라는 문건을 손에 일단 쥐었다, 앞으로 카드로 사용할 것을 쥐었다 하는 면에서 우리 대표들은 어찌면 그것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조항에 역점을 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로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도준호 부장께서는 모양을 가지고 북한과 우리가 밀고 당겼던 것을 관찰하셨고, 서시주 부장께서는 7·4공동성명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주시면서 문건으로 그칠 우려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MBC 송도균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도균 지금 두분 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합의서 채택의 역사적 의미에서 저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채택의 역사적 의미는 전적으로 합의서의 실천여부에 달려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합의서 문맥을 훑어보면 실천 가능성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가령 아까 도 부장께서 말씀하신 언론, 출판물, TV의 교류와 협력부분을 보더라도 며칠전에 합의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물어 보는 앙케이트가 왔었는데 저는 교류와 협력 실시부분이 사실 합의가 안됐다고 표현을 해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정부쪽에서 보면 「언론교류와 협력」 하면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방송에 종사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교류와 협력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가령 양독 기본조약에서는 특파원의 상주교환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념적으로 교류와 협력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해 봤지 방송분야에서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저의 경우 교류와 협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특파원 교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과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북쪽에 쏘주고 북쪽에서 전파를 남쪽에 쏘주고 그런 구체적인 방송기술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너무 개괄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관념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평가처럼 가령 북한이 얻어간 불가침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 즉각 활용될 수 있는 카드인데 비해서 남쪽에서 얻었다고 생각되는 교류와 협력은 1개월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라든지 또는 3개월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진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가령 그것을 유도하고 북한정권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간다는데 있다면 이것은 대략 관념적으로 표현이 됐고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 대미관계 개선, 대일관계 개선, 핵사찰의 지연, 주한미군철수, 주한 전술 핵무기의 철거 또 자신들의 정권의 이미지 개선 이런 것을 다 분류해 본다면 북한은 당장 얻는 것이 많고 남쪽은 상당한 기일이 지나가야 이 합의서에서 어떤 얻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제가 남북관계를 보면서도 13일날 합의서가 채택이 된 것을 상당히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데, 북한이 놀랍게도 왜 이렇게 합의서 채택에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기에는 최근의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제 지식과 정보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하게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것은 증권시장 주가가, 10일, 11일, 12일까지 아시다시피 14포인트에서 2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3일날 6포인트 떨어졌고 15일날 계속해서 5,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11일, 12일까지 이미 남북합의 가능성이 증권시장에 유포됨에 따라서 그 지대치가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13일날 떨어진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합의서가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합의서 채택 이후에 나왔던 여러가지 비판 여론들, 예를 들어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한 합의를 급하게 만들었다든지 또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합의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 보는 것도 이번 합의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송 부장께서는 의미는 실천을 두고 봐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으로 볼 때 북한은 이미 얻었고 우리는 앞으로 얻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실천 가능성의 보장이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상당히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개괄적이고 관념적 표현이 많아서 구체성이 적어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가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무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영무 이번에 합의서 채택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했습니다만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다,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7·4공동성명하고 주로 비교를 하는데 7·4공동성명은 『상부의 뜻을 받들어』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소재를 막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는 당국간 합의, 정원식총리, 연형묵총리가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약이라는 용어는

안붙었습니다만 명칭은, 조약으로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문서,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북한의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아서 최고당국자가 서명하게 되면 이것은 조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최소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인정했다는 것,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 또 불가침,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합의, 또 비방증상 중지를 한다든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 중지를 한다든가 남북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그래서 과도기에 남북한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법적 관계를 안정되게 정리했다는 면에서 매우 잘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천문제는 역시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즉 이것은 실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을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북한이 얼마나 진실성있게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내려올 때 도장까지 가져왔다고 북한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북한은 상당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소련의 급속한 붕괴라든가 북한의 경제붕괴, 경제가 바로 붕괴직전까지는 다다랐다는 것, 소련의 원조도 중단되었고 식량난이 겹쳤다는가 원유도 완전히 거의 고갈이 됐다든가 외교적으로 두드려 보니까 북한이 외교관들이나 외교부장을 보내가지고 서방의 외교를 두드려 보니까 완전히 고립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것이 아무런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든가 또는 핵협정에 서명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뚫고 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서에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합의서에 대한 효력이라고 할까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리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여박사께서는 국제법 박사답게 법률적으로 성격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간 서명이기 때문에 조약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의 동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장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수근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언 부언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이번 합의서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섯가지로 압축을 해보고 거기에 곁들여서 문제점 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13합의서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남북이 대결시대를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새지평을 여는 계기를 함께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찾고자 합니다.

탈냉전적 국제정치의 새로운 기류가 드디어 한반도에도 도착했다는 상징으로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번째는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펴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의 초석이 이번에 12.13합의서로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남북은 12.13합의서 도출로 인해서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12.13합의서는 또한 향후 수년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노란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번째 의의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종래 북한은 두개의 조선, 분단의 고착이라는 정책이라면서 우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종래의 태도에서 탈피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가 이번 12.13합의서 도출이후 생산적으로 전개될 소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정치 군사적 대결이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축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반도만은 그 세계적 추세에서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채택으로 군사적 충돌의 재발 가능성을 축

소시켰고 또 남북간의 군축 진척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뜻을 지닌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대화 형성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서로 인식했다는 점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여년간 단편적으로 남북대화가 지속되어 온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동안에 얻었던 열매는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12.13합의서는 성의있는 남북간의 대화가 민족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남북이 공히 깨닫고 그럼으로써 향후 정권의 변동에 관계 없이 남북간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발전을 할 것으로 저는 전망 합니다. 그러나 12.13합의서가 이런 청사진만을 제시한 것은 또 아닙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북한의 실천의지가 되겠습니다. 7·4공동성명도 남북이 발표한 이듬해 바로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 12.13합의서도 북한이 과연 실천하느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13합의서 도출이후 박성철을 비롯해서 노동신문 논설등을 통해서 북한이 성실하게 실천할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겠습니다만 7·4공동성명과 달리 이번 합의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미, 대일 수교내지 관계개선용 카드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은 북한이 7·4공동성명과 달리 12.13합의서만은 자기들이 성의껏 실천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논거로는 역시 지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또 국제적인 고립, 이와같은 양대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대미, 대일수교가 절실하고 그 전제로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북한당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때 실천에서도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근 부장께서는 이번 합의서에 대한 포괄적 기능, 평가 내지는 의미 정리를 해주시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합의서가 문서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를 표시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평가에 의해서 이번 합의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잘못된 점, 미비점 그 법률적 성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영무 박사가 지적하셨듯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운영, 북한의 성실성 이것이 역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토론해주실 사항은 합의서 채택이후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되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핵사찰문제, 두번째는 남북대화 관계, 세번째는 북한의 대서방외교 관계, 국제관계 이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리라든가 능률상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자 한분께서 5분씩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MBC 송도균 부장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이하는 같게 되겠습니다.

**송도균** 우선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재선언으로 완결된 우리쪽의 핵사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남북대화의 합의서채택과 핵사찰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그런 정부의 원칙을 밝혔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병행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월 18일날 6차회담 이전에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합의서의 발효가 가능한 것인지 또 남북쌍방의 의사에 의해서 실제로 그것이 발효됐다고 해서 그것이 대국민 설득력을 얼마나 가질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사찰문제만큼은 그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 핵사찰 문

제에 관해서 이번 합의서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합의서 채택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여론이라든가 남쪽 언론의 반응은 북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지난번 평양에 가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서 부장한테 우리가 남북관계 기사를 쓰면서 남한 정부만을 겨냥해서 어떤 견제적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평양에서 가만히 살펴 보니까 남쪽 정부는 오히려 우리 언론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한 부분이 많은데 북한측 당국자들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했습니다. 합의서 이후에 일어난 남쪽 언론들의 비판적 시각,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비판적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도 합의서 채택과 핵사찰이 전혀 관련없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쯤 버렸지 않았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2월 25일날 IAEA 특별이사회 결의라든가 그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이관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북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어도 현실적인 핵사찰까지, 가령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그것이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서명원칙을 발표 수락하는 정도까지는 그이전에 가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2월 18일 6차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팀스피리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스피리트 문제는 제가 영광스럽게도 서 단장을 모시고 평양에 갔을 때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팀스피리트훈련이 시작되면 북한 군사력이 거의 100% 대응전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응전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북한측에 발생하는 것 같고, 두번째는 노동적위대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민방위조직 같은 것, 함경북도에서 황해남도에 이르기까지 그때 북한에 가서 들었는데 이 두번째 것은 평양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대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는, 우선 첫번째,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발생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도 팀스피리트훈련이 없어지면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체제유지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팀스피리트훈련 반대라

는 것도 좀 여유있게 우리쪽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팀스피리트훈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소련의 붕괴와 관련하여 레이건의 공세적 정책이 결국 오늘날 소련의 붕괴를 가져 오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팀스피리트훈련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대화의 유지, 대화의 유지라는 것이 기껏해야 한달이나 몇주일 정도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팀스피리트훈련 카드를 너무 쉽게 버려서는 안되겠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일본과 북한의 접근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연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역시 핵사찰문제가 관건이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서울이 도쿄와 워싱턴과 얼마만큼 보조를 일치시키고 감각을 일치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령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CBS기자들이 최근에 취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두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까지도 얘기되는 상황이었고 또 한국정부가 그것은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큰 성명이 나왔고, 그 와중에서 자기네들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을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두번째는 한국에 배치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여론, 한국 정부, 미국정부가 그 존재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 핵무기의 배치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철수되기 시작 했으면 자기들이 예상하기로는 서울은 일종의 안보공황 상태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하고 와봤더니 역시 서울 사람중에서 전술핵무기 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하자면 그와같은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감각이 어느 사이에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피동적

으로 되어 버렸다. 그래서 피동적인 여론을 이끌고 남북대화를 한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환경문제를 이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이 기대한 것만큼 높아지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미국과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감각의 일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상당히 작용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핵문제, 앞으로의 남북대화 문제, 북한의 대미, 대일접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도쿄와 워싱턴에 좀더 기민하고 세밀한 그런 외교적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송 부장께서는 핵사찰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북한의 서방외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정부가 미국, 일본과 긴밀하고 세밀한 협조와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박사께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여영무 먼저 핵사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쪽에서 지난 11월 8일,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노대통령의 핵관계선언 그리고 12월 18일 핵부재선언 두가지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는데 있어서 북한에 명분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곧 이 사람들이 연내는 아니더라도 1월 중으로라도 서명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전략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조하는 목적이 첫째는 뭐냐 하면 김일성체제의 붕괴 방지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있어서는 민족문제니 뭐니 하지만 자기들의 부자세습체제, 김일성정권유지, 이것이 제1차적인 최우선권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핵무기 개발이 정권의 정당성 이것 때문에 개

말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미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겠다. 물론 합의서에서 평화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남북사이의 문제로 귀착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외교적인 전술로서는 아직도 대미협상용 카드로 이것을 이용해 먹겠다 그런 뜻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서를 채택할 때 핵문제를 동시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김일성이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만 문선명씨에게 자기가 부시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범상치 않은 그런 요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가면 북한은 앞으로 핵서명하지 않고 대미, 대일카드로 계속 악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의 사활의 문제가기 때문에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에게 있어서 또 합의서를 준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의 논리를 행사해야 된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에게 경제적인 실리 이런 것도 보장하면서 또 우리가 힘으로 밀어 붙이면서 리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은 당분간 뿐 아니라 가능하면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이것을 개방하지 않고 보류해 둘 것이라고 봅니다. 그대신 경제교역이라든가 문화교류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상호교류하는 정도로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일등 대서방 관계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일본수교를 먼저하고 자기들 스케줄대로 대미개선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대일, 대미, 대서방개선은 미국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은 견제없는 그런 세계전략이라고 할까, 미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세계의 법과 질서 이런 것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를 하면 일본수교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대하면 남북대화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나, 물론 우리의 주체성은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여기에 우리는 편승해 가지고 미국세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는 미국의 의사를 거슬러서는 대일 수교도 안 되겠구나 또 남북대화도 잘 안되는구나, 독일하고도 수교를 하려고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을 방문해 가지고 수교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 응답은 아주 절대적인 거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혁 개방에 너무나 무성의하다,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다, 이런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대일수교라든가 대서방수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로든가 대미개선은 물론이고 이것은 역시 미국이 우리가 좋은 싫든간에 열쇠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여영무 박사께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악용할 염려가 있지만 노대통령의 비핵선언과 핵부재선언의 명분을 얻어서 핵사찰을 수용할 것이라고 역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셨고 북한의 대화에 대해서는 인적교류 내지 개방은 보류하겠지만 그밖의 교류는 역시 예상이 된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힘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에 잘 적응하고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겠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 일본, 후 미국의 스케줄을 지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신문 장수근 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수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사찰에 관해서는 저도 여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동기는 어제 발표된 노태우대통령의 한국 핵부재선언이 되겠습니다.

기왕 12.13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우리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부정적 전망은 어제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제선언으로 말끔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 정원식총리께서, 영변, 순천비행장과 군산비행장의 동시 시범사찰제의를 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뒷이야기였습니다. 전후를 미루어 봐도 그와같은 해석은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대통령의 핵부제선언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거듭 주장해 왔던 핵사찰 거부와 핵무기개발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또 기왕에 북한은 한국정부로부터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 제공이 있기를 사실은 기대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기대가 이제 노대통령의 핵부제선언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고 동시에 핵사찰 수용을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두번째 남북대화의 변화 전망입니다.

합의서 발효후 3개월내에 설치될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이 세개 기구가 예정대로 가동되겠습니다만 북한이 그 가운데에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쪽에 비중을 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같은 이유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마이너스 3.7%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북한은 지금 심각한 연료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소련 IMEMO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던 1인당 식량배급, 특히 평양거주시민에 대한 1인당 식량배급량이 600g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평양시민들은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데 그 평양시민들에 대한 식량배급량도 줄어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쪽의 경험에 거는 북한의 기대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88년이후 지금까지 남북간의 교역량이 2억불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간접교역이 아닙니까, 그러나 12.13 합의서 발효 3개월 이후에 설치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그 창구를 이용한 남북간의 경험은 상당히 적극성을 떨 것으로 봅니다. 또 북한이 거기에 거는 기대 역시 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남북한 경제교류쪽에 중점이 두어져서 진행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되고 고위급회담은 역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선에서 대화채널로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의를 이번 합의서 도출에서 북한측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추론은 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일관계 개선을 포함한 대서방 외교의 전개입니다.

이번에 북한대표단이 내려올 때 김일성주석으로부터 확고한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회담에 참석했던 대표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이 이번에 합의서 도출에 걸었던 기대는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않는 한 자기가 지금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대일, 대미수교 및 관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것은 저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약 50억달러로 추산되는 보상금,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50억달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내지 보상금으로 북한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캄플주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수교가 아주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이끌어낸 이후 이것만 가지고도 일본하고 관계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일본의 대북한 접근에는 한국과의 조율이 전제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그와같은 일본측의 방침은 신임 미야자와총리를 통해서 거듭 확인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은 가속화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본이 적극성을 떨 것으로는 짐작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서두를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사실 미국측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중에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실종자, 또 사망자, 전사



자 유해의 회수를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왔고 또 작년에도 판문점에서 스미스 위원이 직접와서 유해를 인도해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필요에 의해서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시각이 맞아 떨어질 때 속도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상당히 낙관된다고 봅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장 부장께서도 핵문제에 낙관을 하시고 대화는 역시 북한이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류를 위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 대화는 경제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고위급회담은 이미 거의 달성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징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의 외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 특히 일본과는 50억불 쟁취를 위해서 합의를 외교무기화해서 적극성을 보일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준호 부장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도준호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점이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핵사찰 문제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저도 핵사찰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북에서 여건을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을 비롯해서 지난번 고위급회담에서 정부가 비대칭적인 말씀을 합니다만 영변과 군산간에 핵사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서명후에 저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과정에서 당장 쉽게 비준을 할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을 노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남북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체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체제유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 기본방침과 또 한가지는 공세적인 입장

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체제유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장 부장이 이야기 했듯이 경제교류쪽을 저쪽에서 쉽게 적극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통신, 신문, 방송문제, 이것은 체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그리고 시간별기 작전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가침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실지로 우리가 불가침부분에 대해서 남한쪽에 신뢰구축과 다음에 군축을 하자는 그런 단계론에 대해서 군축을 당장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지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노리는 문제가 이제까지 주한 미군문제라든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통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일수교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분의 말씀대로 대개 일본하고는 수교가 급진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절실한 필요성도 있지만 오히려 일본도 북한하고 수교를 명분으로 핵사찰문제라든가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내걸었지만 일본 입장에서 북한은 좋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도 종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미국은 이제까지 동아시아 문제에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가 일단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 문제는 어느면에서 물론 전연 관여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한국의 문제, 남북의 문제지 이것을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핵사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으로 낙관하셨고 대화는 체제유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올 때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수교문제는 미국, 일본이나 북한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서 급진전될 것이고 따라서 더구나 핵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볼 때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서시주 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서시주 저는 다른 각도에서 북한의 정책변화가 합의서 이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풀이를 해나가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통치기반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북의 통치기반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의 정책이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로 합의서가 채택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핵사찰 문제는 어떤식으로 풀이 나가겠느냐 저는 두단계의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는 오늘 1월말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핵안전협정 서명에는 응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협정이 서명되고 나서 90일이내에 사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상당히 지원을 해서 첫단계로 안전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적하신대로 화급한 대일수교에 하나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 하고 대일수교에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일단 대일수교가 어려움에닥치고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네분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하반기 정도에 IAEA 강제사찰이라도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압력의 강도에 의해서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핵사찰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대화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팀스피리트훈련도 나오고 해서 여러가지 관건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네들이 6차 고위급회담을 잡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송 부장하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신대로 팀스피리트훈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팀스피리트가 여기서 강행이 되면 자연히 6차 고위급회담도 뒤로 미뤄지고 합의서의 발효 문본교환시기도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만 여기 저기에서 나온 징후로 봐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6차 고위급회담은 열어야 되겠고 팀스피리트 훈련도 해야 되겠고 이런데에서 상당히 난관이 있는데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 상당히 규모도 줄인다고 아예 팀스피리트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대화는 그 정도인데 거기에서 특히 정상회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두가지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침선언이 이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불가침은 이번 합의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는 민족통일 방안에 대하여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만 충분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서 채택은 충분조건은 안됐지만 필요조건 한가지는 충족이 됐기 때문에 대외적인 외압때문에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의 정치일정을 보더라도 3월 이전에 뭐든, 정상회담이라도 하나 꽃을 피워야만 현재의 집권당이 득표에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되어서 우리쪽의 필요성이 조금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민족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내치와 연관시키려는 결코 쉬운 상태로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서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미·일에 대한 북한의 정책, 대외정책, 북한이 아시다시피 크게 변화 했습니다. 대남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외정책은 살아남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것도 가장 먼저 일본과 수교를 함으로써 아까 어느 분도 지적을 했다시피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는 경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북한이 존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50억달러라도 얻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현안이다.

이래서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대로 1월31일 이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핵안전협정 서명만 하면 일차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일본 역시 아까 도 부장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 먼저 들어가서 지금 현재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동북아의 질서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에 요구하는 노동력이라든지 그것 보다는 시장을 선점한다는 경제적인 동물의 차원에서 일본은 남북의 통일을 끝내 원하지 않고 분단된 상태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가면서 대북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북한과 일본은 어쨌든 맞아 떨어져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수교까지 가지 않겠으나, 이런 전망을 해보고 다만 미국은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3각관계로 일본의 대북한 수교와 조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외교력의 총력을 바로 이런 미·일의 외교에다가 집중해야 될 것이 내년이다.

물론 국내적으로 선거도 있고 큰 행사가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점들을 회담에 임하는 대표로부터 정부당국자들이 깨달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서시주 부장께서 약간 신중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남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초위에서 핵서명을 할 것이지만 실천단계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이는데는 상당히 지연전술로 나올 것이다.

남북대화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나올 것이다. 정상회담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수교가 될 것이지만 미국은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두번째 문제,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핵사찰은 다섯분이 다소의 유보는 있으셨지만 대체로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긍정을 하였고, 남북대화도 북한의 필요상, 교류의 필요상 역시 대화도 진전이 될 것이고 북한과 미·일수교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핵사찰 문제는 역시 북한이 현재로서는 중대문제, 즉 화해와 기방을 선택할 것이나, 아니면 과거대로 대결과 폐쇄를 선택할 것이나, 이 선택에서 좌우가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역시 화해와 기방쪽으로 체제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외관계를 개방한다는 그런 뜻입니

다. 그러기 때문에 논리상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또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핵무기가 군사적으로는 저지력, 억지력이 있고 또 외교적으로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지도자가 의지면에서도 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생산단계로까지 이끌어 가질만한 의도까지 있겠느냐는 의도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도에는 모험이 따르고 국제적인 압력, 불이익 여러가지 정책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핵은 갖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남북대화에도 역시 토론자들이 다 말씀하신대로 북의 편이상, 국제환경의 압력상 그리고 남한으로부터의 강력한 압력 이런 것이 역시 진전될 것이고 외교면에 있어서도 북은 이미 개방과 협력을 대외적으로 선택한 이상 역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정리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와 북한의 정책변화의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핵사찰 문제와 남북대화 추진방향 및 대북정책이 되겠습니다. 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다시한번 바뀌어서 서울신문 장수근 부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수근 핵사찰 문제는 거듭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세계의 여론으로 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서 서명을 하고, 핵사찰 수용을 하고, 남북한 동시 시범사찰, 그다음에 정상회담이나 다른 채널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수순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순인데 이 수순대로 과연 북한이 행동할 것이냐,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라든가 여건으로 봐서 북한이 처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중에 핵심사항이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인데 몇몇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향후 2,3년안에 갖출

그럴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 뭐나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전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같은 자원대국도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미국전체의 발전량의 1/3이 소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뜰이나 에너지난이 심각한데 그 여력가지고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다는 전문가들 관측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문제는 북한이 세계 여론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또 미국, 일본의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핵부재선언이라는 명분을 구실삼아서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2.13합의서 도출이후의 남북대화 추진방향인데요. 이번 합의서체택은 어떻게 보면 현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혼란없는 북한 체제의 변화내지 개방이지 북한체제의 파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경우 그것을 떠 맡을 여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동서독 경우와 달리 지금 한국이 북한의 파멸이후 북한을 수용하려면 통일비용으로 계상된 것만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점진적이고 시차를 둔 변화, 이것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북이 공히 서로를 비난의 객체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12.13합의서를 이끌어낸 이 마당에 차후에는 북한이 실사 남한을 여전히 비난의 객체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형의 큰 품으로 북한을 껴안는 그러한 포용력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의 바탕에서 우리가 만형의 자세로 대화에 응하고 대화를 추진한다면 지금 개방의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마지못해 응하는 그런 자세로서 출발해서 좀더 깊이있는, 내용있는 대화가 전개되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서 이후 북한측이 신뢰할만한 대응을 보인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급적 빠

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절차와 형식에 구애를 받는 고위급회담이나 국회회담, 체육회담 이와같은 여러 채널의 회담보다도 역시 정상회담이 갖는 결정권 때문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응을 지켜 보다가 정말 신뢰할만한 대응이 나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성사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만 이와같은 일반적인 의구심에 대한 최근의 아주 희망적 관측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의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이 11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고위층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일성은 못 만나고 왔습니다만 북한의 고위층을 많이 만나고 와서 얘기하기를 김일성도 지금 마음을 비우고 있다 하면서 이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오라고 한 것도 그와같은 인식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풀이를 하더군요. 이것은 저희 신문 도쿄 특파원이 직접 취재를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이 느끼기에는 북한이 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더라고 다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12.13합의서를 이끌어낸 마당에서 거둬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다소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형의 자세로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장수근 부장께서는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은 만형의 자세로서 포용력 있게 대화를 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는 절차와 형식에 구애되어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초월한 정상회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준호 부장께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도준호 우리의 향후 정책추진 방향중 우선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사찰문제는 아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



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IAEA에서 핵사찰을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핵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위협이 제거되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가침조항에 대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여기에 남북간의 보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완적인 조치없이 국제기구에 그냥 맡겨놓고 핵사찰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기보다는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우리 정부가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이것을 합의하기로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남북대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목적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지 북한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만한 교류만 하게 되면 오히려 통일은 더욱 더 멀어지고 아까 장 부장께서도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선 지난번 평양에 가서 느낀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사회는 아닐것 아니냐,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로는 남북 이산가족,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우선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통신과 정보의 교류, 이것이 북쪽에서는 가장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진짜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추진된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정상회담은 오히려 남북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서로간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교환해서 결정적인 것을 해야지 지금 가서 만약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도 정해지지 않고 서로간의 대화도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다시피 정상회담은 마지막 정리하는 회담이지 이것이 전제가 되는 회담은 역시 아닙니다. 따라서 이점을 도 부장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시주 부장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서시주 저는 이렇게 가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정책추진 방향을 어느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현재 우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난국입니다. 북한의 난국이라는 요인을 놓고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제가 있고 지금 앞에 두분이 말씀하신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난국을 급작스럽게 넘어지지 않도록 간접적이거나 시간을 좀 끌면서 개방을 해서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방향, 이 두가지 방안중 우리 정책추진 방향이 어느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정부당국자나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여론이 어쨌다 이런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합의를 끌어낸 것도 북한의 난국때문에 끌어냈는데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숨통을 죄어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흡수통합 형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다른 방안은 우회적으로 돌아서서 어차피 문은 열되 시간을 가지고 그쪽의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방안, 이 두가지의 가상을 놓고 정책추진하는 사람들이 방침을 딱 세워야 됩니다. 왔다 갔다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난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극우의 목소리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은 남북한이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우선 대북정책에는 경제협력에 주

안점을 뒤야한다. 지금 현재 북한의 대남무역은 자기 파트너로서 5개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3개국이나 2개국안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어 들이게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남한제품이라는 딱지만 안 붙으면 그것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던 베를린으로 들어가던, 모스크바로 돌아서 들어가던 그 필요한 물자들 뒤에는 남한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도와줘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대남 의존도가 2대국이나 3대국이 됐을 때 우리 꼬나풀대로 옳아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이러니칼한 얘기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간접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접개방의 효과를 얻지 않느냐, 앞에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개방=체제붕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우회방법으로 들어가는 한국의 물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좋다”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꼬나풀을 당기면 우리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막연한 발상이지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첫째 좋다.

두번째 핵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이 없다고 좀 얘기해 달라” 이것이 가장 핫이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절대 말 안합니다. NCND정책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미간에 긴밀한,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다 했어요. 우리는 핵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핵우산속에서 지금까지 한 것도 미국과 긴밀한 연락하에 “당신이 이렇게 발표하시요.”하니까 발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핵문제는 거의 했으니까, 다음은 한미나 한일관계, 외교력으로 해서 IAEA도 좋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좋습니다. 그렇게 외교력으로서 간접적으로 강제 핵사찰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북정책은 내가 아까 포괄적으로 간접적인 경제협력 방향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에 발목을 잡혀 버린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하나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다만 그러면 앞으로 합의서에서 나오는 실천은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뒤야 되겠느냐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도 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남한의 현안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70세이상 이산가족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도 우리가 어거지를 쓰지 말고 판문점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북한을 가면 북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런 전략까지 세워놓고 처음에는 물론 북한에 가겠다고 해야죠. 그러나 마지막 카드 하나는 실천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판문점에 만남의 장소를 두어서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산가족의 만남을 하고, 두번째로 내년 연초에 가서는 판문점에 우체국 하나라도 세워가지고 몇천통되는 편지라도 서로 남북이 ITU를 통하지 않더라도 국제전기통신 통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남북관계 우편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쉬운 것 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가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의 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균 부장 토론해 주시죠.

송도균 짚막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핵사찰 전문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일치된 견해가 “서명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명, 비준, 실제 사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전략은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이 “핵문제는 쌍방 사찰로 대치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국제사찰이 먼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국제사찰과 쌍방사찰이 동시에 우리쪽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사찰 안전협정에 서명을 했을 때 북한이 서명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어야지 이것이 남한에 대한 어떤 양보로 비취져서는 안되겠다, 또 남한이 북한이 서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회담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사찰 문제가 남북대화애 마치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데 꺾끄러운 것을 피해가는데 인지상정이지만 이 핵사찰문제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서 못지 않은 정열을 가지고 핵사찰문제에 달라붙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 부장님은 상당히 빠른 어떤 합의나 진척을 많이 기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북대화애 대해서 진보적인 세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언론이나 여론이 오히려 보수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체가 대단히 염려스러운 사태다, 그래서 천천히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피력합니다. 그것이 2월18일날 발효되면 어떻고 5월18일날 발효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46년을 기다려온 문제인데 이것이 정부가 진보세력인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빨빠르게 가다가는 역시 국민적 신망을 잃어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북한문제를 빨리 다뤄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호기론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먹어야 된다 하는 논리인데 서시주 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호기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제가 몇달 지났다고 호전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는 뒤로 갈수록 더 호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화문제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일부의 우려대로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어떤 사람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연관되어 가지고 날짜를 잡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 국론분열의 국란이 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염려를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다음 여영무 박사께서 말씀해주시죠.

여영무 핵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핵문제이고 마지막

까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핵문제가 아니겠으나, 깨끗하게 해결 안 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대남이나 대일, 대미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것이 핵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탄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이것을 100프로 200프로 활용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50:50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 이런 것을 보면 내일이라도 금방 북한이 사인하자고 달려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진행속도가 남북관계라든가 소련의 붕괴 이런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도 26일날 어떻게 사인해 버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마지막까지 어렵게 까다롭게 남아있을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핵서명은 2월쯤 해놓고 그후에 질질 끌다가 또다시 무슨 땅굴 파가지고 핵을 감춰놓고 또 지하에서 개발한다든가 이것은 아무리 IAEA라든가 유엔이 가서 사찰을 해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라크 경우가 그렇다시피, 베트남이나 북한은 땅굴파기가 전문인데 전부 다 지하화 됐다는데 월남패망 한 다음에 보니까 미군 사단본부 앞으로 땅굴이 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땅굴은 감추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속임수를 쓰지 마라” 7·4공동성명 발표해 놓고 계속 땅굴파기 하고, 간첩 보내고, KAL기 폭파하고, 국제테러리스트 수출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너희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재처리시설 일체 포기하고 그래야만 합의서 준수 전망에 대해 한국인이라든가 세계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너희들의 활로도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잡고 설득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이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일, 대미수교에 있어서 북한이 반드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북한하고 수교하지 말라, 미국도 물론 우리가 얘기 안해도 미국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지 말라 하는 열쇠를 우리가 끝까지 꼭

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속임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핵 저지를 위해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IAEA, 유엔, 대일, 대미외교, 강제사찰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원조라든가 경제교역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당근과 채찍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당근과 채찍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통일정책, 대북방정책,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정치스케줄에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음내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양보 안해도 될 것을 양보하게 되는 이런 부조화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인식을 국민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고 장애가 있을 때는 집권층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때 김일성이 통일전선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헤가지고 내년이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느끼고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이 물론 어제 노대통령은 금방 될듯이 1월 이나 2월에 될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정상회담이 내년에 되든 언제가 되든 -우리가 김일성에게 내거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화합하자” 이제부터 한탕어리가 돼서 잘하자, 서로 용서해 주고 손잡고 나가자, 이런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사과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25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고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과, 아웅산묘소 폭파 사건에 대한 사과,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대남교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회담을 막연하게 정당한 이슈라든가 의제없이 국민이 설득할만한 이런 것이 없이 김일성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될때는 김일성정권만 정당화시켜 주고 선거이용이라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설득도 아주 납득도 안 될 것이고 또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이라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6·25때 아시

다시피 3백만이라는 우리 동족이 죽기도 하고 부상 당하기도 하고 전국이 초토화된 것 아닙니까. 이것 김일성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이것은 국제법적 논리로 한다면 나찌 전범처리에 의해가지고 평화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나찌 전범처리할 때 이런 인도에 반한 죄라든가 평화에 반한 죄, 이것이 2차대전후에 국제법적 규범에도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김일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당국에서도 정상회담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감사합니다.

법률적 논리와 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다섯분의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다섯분 토론의 공통점을 보면 이번 합의서는 우리 민족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에 아주 소중한 성과다.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놓았다. 이 소중한 성과와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따라서 민족문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따라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만 성과를 실천단계로 옮겨서 우리 민족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당근과 채찍, 점진적이면서도 교류를 꾀하는 이러한 신중하고도 양면정책이 모두 구사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민족적인 고려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추진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만 너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먼 미래, 통일후의 우리 국가상과 민족상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민족의 이익이나 자존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시각에서만 모든 문제를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볼 때 북한의 동포는 우리 국민이 되고 북한땅은 우리 영토이고 또 북한



은 우리가 통치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게되고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염두해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례식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멘이 이 방식으로 통일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단국가 정부 쌍방의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는 상대방의 집권 세력입니다. 정책은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질서속에서 통합과 통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상황이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방식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독일식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한테 유익하고, 우리 민족 장래에 이익을 보장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례식 방식으로 북한정책을 추진하되 통일의 모델만은 독일식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독일식 방식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집권세력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네 체제유지의 필요상, 자기네 정치생명의 유지 필요상 개방을 거부하고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집권세력, 체제유지 세력의 의지를 통일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정책 목표는 3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교류에 의한 통행, 물적교류에 의한 통상 그리고 통신교류에 의한 우편, 전신, 소포, 통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면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많은 정책목표를 세워왔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으로 뒤야할 것이 바로 3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3통만 되면 북한은 통일직전의 동독의 상태가 되고 만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통일의 방식은 전혀 달라집니다. 통일의 방안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북한을 접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북한의 집권세력은 이미 없어집니다. 북한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가서 북한이 남한의 체제,

남한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의 국내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일방적인 흡수에 의한 독일식 통일, 이것을 우리가 또한 명시적으로 내걸 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묵시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할 정책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을 민족주의에 토대를 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에 포위돼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4대 강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약소국 보다는 자기네 국가 목표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간섭과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현명한 통일정책,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상황이 오더라도 민족의 이익, 민족의 장래,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고 노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책의 바탕위에서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두르다가 통일이 지연되거나 민족의 이익, 민족의 장래, 민족의 권위가 손상이 된다면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통일은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 견해로서 결론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2. 第2次 討論會

일시 : 1991年 12月 20日

장소 : 大韓商工會議所 會議室

### 〈討 論 者〉

- 司 會 : 鄭鍾旭(서울大 教授)
- 討 論 : 申正鉉(慶熙大 教授)
- 柳炳華(高麗大 教授)
- 張達中(서울大 教授)
- 車榮九(國防研究院 研究部長)
- 崔相龍(高麗大 教授)
- 河龍出(서울大 教授)

사 회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모임은 지난 12월 13일날에 있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고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대단히 의미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 채택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약 한시간 반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점심을 드신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토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순서는 주취측에서 대충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첫째는 합의서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합의서 채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이 우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측면에서는 합의서 채택이후에 남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이 있겠습니까. 특히 북한의 정책변화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핵사찰문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 교섭문제, 또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문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서방 정책이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까. 핵사찰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북한간에 대화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진행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지금 시간 계획은 오전중에 합의서 채택의 평가와 의의문제, 그리고 합의서 채택이후에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을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신 다음에 우리쪽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합의서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나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서 채택자체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서 채택이후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북한 관계는 대화의 시대에서 교류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여서 합의서가 채택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북간에 걸려있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 핵문제라든지 혹은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변화의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합의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 합의서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서가 갖는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서는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얼마전에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베를린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기간중에 바로 남북간에 합의서 채택이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북한이 이번 합의서 채택에서 대단히 열성을 보인 것이 아니냐, 한국 국내언론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도하는 그런 측면이 없진 않습시다마는 이런 합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장해 왔었고 또 북한이 받아들여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우리측 주장을 수용한 점이 합의서의 군데군데에서 엿보이게 된다. 특히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 가운데 북한이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였던 점들로서는 북한의 개방문제, 특히 남한의 언론매체에 대한 북한의 개방문제를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이번 합의서에서 북한이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원칙적인 의미에서 북한이 남북한간의 언론출판에 대한 개방원칙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하면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종래에 주장해 왔던 것은 처음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교류협력자체를 근본적으로 부

정을 하다가 4차 회담에서는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을 수용 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이 문제에 관한 경험을 교환한다고 하는 대단히 제한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번 합의서에서는 그런 제한적인 입장이 풀어져 가지고 남북한이 상호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언론 출판에 대한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는 원칙이 남북간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4차 회담에서 이미 그런 북한측 입장이 나옴으로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 왔었는데 4차 평양회담에서 원칙적으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표현을 합의서에 담기로 그렇게 북한측에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연락대표부 문제가 그 다음에 지적이 되어 되겠는데 상주연락대표부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합의서에는 비록 판문점에 연락사무소의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남북한간의 상설 접촉창구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북한은 남북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꾼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했었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휴전체제를 반드시 남북한의 당사자 해결원칙이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종래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입장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도 남북한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를 했었고 그것이 이번 합의서에서 보게 되면은 『남북한의』가 아니고 『남북한간의』 남북한 사이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그런 원칙을 일단 북한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불가침 선언과 관련지어 가지고 불가침의 경계선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주장했던 소위 점의 개념 그런 것이 일단 후퇴가 되고, 우리측이 주장했던 선의 개념으로 불가침의 경계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서해 5도에서 휴전선 서쪽에 이르는 수역에 대한 경계선 문

제가 우리 입장에 가깝게,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이 되었다. 아마 그런 몇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라는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취해 왔던 입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합의서 내용은 일단 우리측 입장을 대단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좀 중언부언 했습니다마는 그밖에 여러가지 합의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현** 이번 기본합의서의 의의라든지 평가에 대해선 그동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보적인, 좀 너무 서두르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분단 45년부터 따진다면, 분단 46년만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북한 관계가 어차피 평화와 또 그것에 기초한 통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 한다면은 이번 기본합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또 74 남북공동성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비교적 진일보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좀더 포괄적이고 또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4 공동성명보다도 한단계 높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남북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번 기본합의서가 나오게 되는 한반도 내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72년도의 74 남북공동성명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천가능성도 상당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2,3년, 수년간에 보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면에서 보면 상당히 국제관계가 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해왔는데 남북한 관계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합의서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내에서도 역시 전후에 형성되어 있던 대결적인 냉전구조가 이제 붕괴되는, 또는 그것이 극복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번 기본합의서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것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남북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가 대화나 협상보다는 어떤 대결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에 기본합의서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아까 대화에서 교류, 협력의 시대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대화와 교류와 협력과 또 공존과 평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남북한 관계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보면 역시 새로운 시작에서 해야 될 과제가 이제부터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기본 합의서가, 물론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그런 형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합의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 제기에 불과했고 또 남북한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만나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그러한 단계를 표현한 것이 합의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데에 아마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남북한 관계는 이제 협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합의서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공동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자라고 해서 정치, 군사,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서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많은 문제들이 그런데서 논의돼야 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번 기본합의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형식적으로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것처럼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간에 공존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영까지도 같이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한과 북한의 내부적인 체제나 제도나 또는 구조나 이런 것이 과연 그런 것을 얼마만큼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지금 바뀌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역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는데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구조적인 측면이나 또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에 관해서 그렇게 낙관적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인적교류 문제나 자유왕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이산가족문제를 언급을 하고 포함을 시켰다고 하지만 역시 개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주저하는, 또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남북한간에 앞으로의 관계개선이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핵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회담이 결렬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북한측에서 밤 1시경에 갑자기 나타나서 협상하자, 또는 타협하자라고 나왔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할 때 이번 기본합의서의 의의라든지 또 평가의 문제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밖에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왜 북한이 그렇게 했겠느냐? 왜 그런 태도를 취하게 했고 김일성이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외적인 경제교류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판단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본합의서는 비교적 어려운 난제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서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 회 신박사께서 남북한간에 이번 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었다. 특히 공존과 공영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공존과 공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협상의 시대에 돌입을 한 것이지만 그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동기와 의도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대외관계의 개선, 일본과의 수교문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가면서 한번씩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채택의 의의와 평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핵사찰문제, 북한의 정책변화와 관련지어 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 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제6차 총리회담에 대한 전망문제, 이런 것은 다시 점심 먹고 난 다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장달중** 저도 다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이 우선 남북합의서 채택의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서 채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문제가 몇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째, 아마 시중에서 논의되는 가장 큰 문제가 왜 핵문제와 연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째 문제가 핵문제의 연계문젠데, 왜 핵문제를 남북합의서 채택과 분리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의 지

나친 양보가 아니냐? 또 이와 같은 양보를 해도 되느냐? 어저께 아침엔가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 보면 김경원대사 같은 분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썼는데, 저는 사실은 왜 분리했느냐 그 자체 문제보다는 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상당한 코디네이션 속에서 미국의 각본대로 움직여 간 것이 한국의 이번 남북한 합의서 채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 언론들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반대각도에서 자꾸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정부에서 의도적인 플레이를 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나친 입김에 의해서 소위 말하자면 문제가 해결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적인 시각이 남한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으로 비침으로 해서 소위 말하자면 반대세력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도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째 과연 이 핵문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남한이 소위 말하자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독자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상당히 자주적인 입장에서 취한 조치냐 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우선 이것은 이미 어제도 다른 외신기자를 잠깐 만났는데 다들 한국언론에 대해서 맹폭을 가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무슨 것이냐 말이야, 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브리핑하고 한 그때부터 한·미간에 조정을 다 해왔는데 이제와서 한국언론에서 반대로 자꾸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처럼 에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전에 된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 가져오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내년이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이 다 선거의 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은 남북간의 합의가 나오기 전에 미국의 소위 말하자면 민주당의 주요한 대북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은 제가 인식하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기습공격까지 가는 아주 강경론적으로 민주당이 가지 않았는가?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미국선거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라크 전쟁때에 소위 말하자면 평화론을 폈다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

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터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 북한 이슈가 거론이 되고, 이 북한 이슈와 이것 때문에 미국 하원 청문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핵문제의 분리문제가 남북문제의 가장 큰 이슈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와같은 분리라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증거가 없지만, 이와같은 분리라고 하는 것이 혹시 말이예요 혹시 미국과 북한간에 사전에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없이 이런 것이 가능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상당한, 말하자면 대응과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일본도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도 상당한 정도로 북한과 미국간에 사전적인 통로, 미국의 상원의원도, 곧 솔라즈도 가겠습니까만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남북간에 자주적인 대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위 유도해 낸 거대한 구조적인 어떤 심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 오던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 소위 말하면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힘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움직여졌느냐 또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데, 움직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남북간 문제가 상당히 미국의 어떤 power politics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결부돼 두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남북한 문제를 한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남북 정책에 상당한 갈등을 가져 오는 요소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차승인이라든가 소위 말하자면 주변 열강들과의 교차승인을 통한 남북간의 대화개방이었는데 요새와서 갑자기 자꾸 그것을 유도해 왔어요 이것도 7.7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그런 것을 통해서 남북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자면 한국문제, 한반도문제, 남북간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어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중요한 시도였는데, 요새 자꾸 한반도 문제의 한반

도화, 한국화라고 하는 용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갈등, 국제화와 한국화의 갈등이 상존하는데 이번 이 합의서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기본전략에서, 과연 독립적으로 남북간에, 당사국간에 어떤 한국화의 정책으로 옮겨가서 소위 말하자면 양자간의 대화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로까지 발전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직도 북한을 유도하는데는 국제적인 변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간의 대화만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변수라든가, 미국이라는 변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번에 합의서 도출이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위에서 시도가 됐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다만 하나 경계할 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말려 들어가 있는, 국제적인 입김에 말려 들어가 있는 우리 입장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느냐는 문제는 남습니다마는 역시 남북간에 아직까지 현시점에서 볼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간 당사자간에 대화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번 이 회의의 의의가 과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남북당사자간의 회의로 옮겨 갈 수 있었느냐 하는, 나는 이 세번째 문제는 결국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의 여론인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한 마디 비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국내의 여론에 대한 정부측으로부터의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국내 여론에 조급한 정상회담을 위한 조급한 정부측의 시도의 인상, 이런데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집혀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대소관계, 북방정책이다. 북방정책이 가져온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을 추구한 한국 정치, 북방정책의 오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방정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득과 득실면에서 볼 때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협상패턴, 정책추진패턴이 대북관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정상회담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 자신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 하는 것이 어렵지만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한 조급히 열려질 수

있다면 열려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정상회담의 조급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국가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정권이라고 하는 차원과 결부될 때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통일 한국의 폐해라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즉 국내소비를 위한 남북대화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선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옛날과는 달리 이번에 이와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바람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히 앉아 가지고 내년의 국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와같은 국내 문제와 결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남북대화의 결실로 나타난 합의서 채택이 소위 말하자면 합의서 채택이 가져올 국내 정치의 영향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북대화 자체가 내년에 있을 4대선거에서 통일 그 자체보다는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가 소위 말하자면 정권의 다툼 경쟁의 어떤 제물로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이것은 아마 권력구조의 개편문제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이미 국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대대적인 정책변화는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하고 중공하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모택동과 김일성을 비교할 때 모택동의 현실인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대립적인 구조입니다. 대립적인 구조에서 이 양자를 극한적으로 대립시켜 가지고, 한쪽이 문화혁명에서 마오이즘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개혁을 유도할 수 밖에 없었는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정책수행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관료주의의 폐해가 있으니까 관료주의도 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노선도 중

요하지만 대중노선을 지나치게 하면 그것도 폐해가 있으니까 이 양자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상당히 절충주의적인 태도를 쭉 취해 왔고 이런면에서 보면 북한은 비교적 중국이나 소련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 조정면에서 상당히 신축성을 보여 온 국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같은 경우는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마오이즘은 극단적인 양자를 대립시켜 가지고 마오이즘이 절정에 달했는데 이것이 실패를 하니까 등소평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 언어적인 대립이 통하지 않고 두개를 조금씩 조금씩 장점을 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느리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급격한 국제 변화에 따라 가는데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순을 해결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등소평식의 개혁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국가, 그래서 아주 절충주의적인,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위기를 제가 보기에는 뒤뚱뒤뚱 하면서도 넘겨 가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북한 몰락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것은 경제적인 붕괴인데 경제적인 붕괴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는 북한에 다른 어떤 몰락의 원인은 사실 없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대남자세에서의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씩 조금씩 자꾸 적응해 나가면서 뭔가 자기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변화는 계속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 혹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와 같은 변화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 조금 토론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이 계획된 시간보다도 조금 짧게 알맹이 있는 토론을 해서 회의를 마무리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논의를 그런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핵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북한이 핵 공개사찰을 수용하는 경우 그래서 합의서가 원만히 채택이 되고 북한이 노리는 일본과의 수교 교섭이 잘 진행이 되고 미국과의 개선이 잘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서 아주 경직된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합의서의 비준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절충식으로 생각을 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 또는 완전한 결렬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합의서 채택 이후의 정책 전망을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장박사 말씀은, 아주 여러가지로 재미있는, 정리가 잘된 얘기인데 첫번째 미국의 구도에 의해 이번에 합의서가 채택된 그런 느낌을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구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핵 문제와 합의를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의 구도라면 거기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달중**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이와같은 합의 도출에 어떤 배경이, 미국과 비교적 사전에 상의가 됐을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통령의 미국방문이라 쪽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와같은 핵분리 정책에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와같은 사전동의를 배경이 무엇이겠는냐? 여기에 대한 의심을 안해 볼 수가 없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과의 모종의 거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교신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 교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젠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게도 당근을 주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북한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명분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저의 지나친 노이로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비교적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형성과정에서 남북한이 전부 놀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까 세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셨습니



다만, 저는 어떻게 두번째 시나리오로 북한이 가지 않겠는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주 유연한 자세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강경한 자세에서 부터 결국은 후퇴하지 않겠는가? 또 후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은 모르지만 교신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 회** 미국의 구도라는 것이 이틀테면 분리하는 것을 갖다가 미국이 주도를 했든, 혹은 한국에 동의했든간에 말이죠, 분리하면서 그러나 핵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의 의도를 받아주어 가지고 동시사찰을 수락 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간에 합의서가 그냥 계속해서 비준단계까지 몰고 나갈거다 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 다시 말하자면 이번 12월 26일날 남북한 사이에 핵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실무회담에서 합의서에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런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12월 26일의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이 수용을 해 줄거다 하는 것이 미국의 평가였는지 안 그러면 좀더 남북한간에 핵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제기되어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틀테면 비엔나에 가 가지고 북한이 국제 사찰을 수락해 주고 남북한간에 동시사찰, 시범사찰은 안함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라고 하는 측면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틱스피리트에 대해서 미국이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장달중** 나는 내용은 없고, 차영구박사가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겠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내 여론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니가 보기에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원대한 플랜이라도 되는 것 같지만, 실지 저쪽에서 얘기하다가 너 우리 체면도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북한에서 그랬으면 미국에서 아,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차영구 박사님이 조금 얘기해 주시면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영구** 제가 뭐 큰 답변을 드릴 순 없는데 제가 느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박 사님이 제기한 미국의 power play 문제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박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 하고는 정반대로 미국이 희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없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가지 징후 또는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핵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결이 없는 합의를 미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

첫째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을 뭐 미국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가지 정보와 추측 가능한 것들을 보면 지난 11월달에 접촉을 할 때 핵문제 때문에 주한미군 2단계 빼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구요 그 다음에 핵문제에 특별히 관련해서 내년 도 팀스피리트때 패트리엇등 엄청난 최신에 무기를 가져 오기로 다 약속했고, 더 강화하기로 했고, 핵문제에 대한 강경노선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켜 갖고 합의를 해라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제가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대략적 추측이니까 그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식의 문제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거꾸로 된 것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고요

**하용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차영구** 저는 여러가지 징조들을 다 놓고 그 사실은 내가 알고있는 확실한 사실에 기초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합의서 채택에 대한 배경, 의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이 합의서 채택이 이번에 안해도 됐고 조금 더 기다릴수록 여러가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북한에 당근을 주는 것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조금더 한번만 더 기다려도 괜찮은데 왜 이번에 했는지 사실 좀 놀랐고 또 양측이 모두 굉장히 무엇인가 쫓기는 그런 감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는 대단히 큼니다. 우리의 의도는 우리 정부측에서 대개 하는 것일 테니까 제가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 그럼, 북한측에서 그와같

은 양보를 상당히 많이 여러가지 보여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 봐야 뒤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외교적 성공 분위기, 엄청난 압력의 분위기, 만약 이번에 남북한간에 합의가 안됐을 경우 가정해 보면 북한이 내년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핵을 억제하기 위한 소위 국제적 흐름을 도저히 북한으로서는 감당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일성으로 봐서는 그것이 남북한간에 어떤 타결을 통해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대미, 대일 또는 교차승인이든지, 뭐든지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수교문제라든가 등등에서 북한이 이것을 못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의 한계점을 나는 분명히 인식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수교하는 것을 막는것, 자기네들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버텨보는 것, 일본이 수교하지 않겠다는 것을 버텨보는 것, 이것이 완전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북한의 정책결정자가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다. 남북한간에 합의를 뭔가 이끌어내 가지고 이것 안하면 그 정권 자체의 생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9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주로 한 업적들은 이제 한 며칠 북경에서 좀 높은 사람들 만나고, 전체 열흘 중에서 7일인가를 주로 정계구역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몇건의 약속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양반이 무엇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아는데 한계가 있지만, 저는 적어도 김일성이가 중국이 유일한 소위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도 오래 못갈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소위 생명의 공급선인 중국자체가 정치적 불안정성도 있고 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 한계를 판단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엔 가입할 때도 결국 북한을 돌린 것은 중국의 입김이 가장 컸는데 이번에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이

제 소련사태에 대해서 예민하게 봤을 텐데. 그것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그쪽 문제이지만 대남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찬스다. 한국도 내년이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뭔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동기가 한국에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것도 자기들로서는 미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측도 가능한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북한 자체 내부의 문제는 내년에 만약에 이런식으로 그냥 압력을 핵문제 같은 것 특히 이렇게 쪽 돌아가는 것이 압력을 계속 받는다면 상당히 북한에 김정일 체제로의 후계문제 같은 것도 대단한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적어도 북한의 정권 자체가 생존하는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에 개혁이나 개방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자기네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일단 의도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서 본다면 한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가 어찌할 수 없이 가져 오는 결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건 어차피 따라 오는데 최소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것이 실제화되는 과정을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문서 자체가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다면 진짜 효과를 그대로 발휘한다면 그건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쌍방이 상대방을 적대적인 국가 또는 적대적인 행위 특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모든 분쟁은 대화로써 평화로써 풀어나가고 또 군축, 군비통제, 신뢰조성 이런 문제도 하기로 했고, 경계선 인정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평화공존, 이것이 그대로 효과적인 말 그대로만 작용한다면 지금까지의 논리, 북한이 통일하겠다는 논리,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논리, 또 우리가 북한을 대해왔던 여러가지 군사적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일거에 깨지는 문서입니다.

무력사용의 포기이기 때문에 이제 적을 판데서 찾아야 됩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느 정도 효율화 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 자체로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적어도 법적으로 남북한간의 약속에 의해서 평화적인 공존은 이 문서가 그대로라면 보장한다. 더이상 싸울 일도 없고, 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때 우리는 굉장히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큰 모험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라든가 일본과 북한의 수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안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는 것 밖에 우리가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 만약에 북한이 제처리시설까지는 안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파란불을 켜줍니다. 일본의 북한접촉, 미국의 북한교류, 대화 뭐 다 좋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무력포기한 상황에서 왜 미국, 일본이 북한을 돕고 교류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아무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동시에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의 할 일을 했다.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핵문제가, 아까 정교수님 몇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핵 문제가 우리의 좋은, 우리의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갈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자면 가져도 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사회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탄분들 좀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애긴데 말이죠, 차박사 말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수교, 미국과의 관계개선 또 그것을 둘러싼 중국의 압력, 이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북한이 이번 합의서를 채택했고, 그래서 북한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크게 걸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핵문제에 관해 실무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북한의 대응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합의서 채택의 의의라든지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해서 전면적으로 수락이 안되고 다른 어떤 북한의 변칙적인 대응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지 말이죠.

**차영구** 북한측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두가지 차원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의무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상호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것들입니다. 분리된 것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불안감을 안주고 정말 진지하게 추진할 상황이면 북한은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군산 기지까지 다 내 놓겠다, 우린 보일 것을 다 보이겠다는 상황이니까, 그건 국제적인 의무를 떠나서 상호신뢰, 남북간에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국제적인 의무는 별도의 것으로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만 핵문제는 해결됐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것 만큼 해결돼야만 이 핵문제는 해결됐다 볼 수가 있는데 그 두가지에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장교수님 처럼 저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그 두가지를 다 얼마만큼 빠른 시간내에, 어디까지, 사찰을 직접 받고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긍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안나가면 이제 남북합의서라는 것이 없어지고요, 우선 실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불신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문서가 될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북한이 이것을 제가 아까 이런 이유때문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만약 심각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받는데 재처리시설 포기하는 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지역에 대한 사찰문제, 편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IAEA에 대한 서명과 국제사찰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선까지는 북한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제가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지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고, 또한 자기 사회가 어차피 개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국제 사찰단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도 들어가서 영변까지 구경 다해

야 되고 한국에게 또는 국제기구에게 상당한 개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내부적인 소위 개혁이나 어떤 개방에 따르는, 개혁까지 갈 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개방에 따르는 내부적인 쇼크를 제거하는 상당한 노력이 안따르면 북한의 정권 생존을 위해서 한 것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큰 위협부담을 북한이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됐을 때 이것이 평화를 공존하는, 평화를 보장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북한의 정부가 진짜 이것 때문에 대단한 모험을 걸게 될지, 개방하게 될지, 이것이 어느쪽으로 갈지 대단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문건이다라고 보는 한편, 그 의의 또한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 회 합의서의 내용과 동시 사찰이 다른 국가들에게 그런 큰 개방의 부담을 줄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변에 대한 시범 사찰을 수락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개방이라는 그런 부담을 북한에게 줄 것인지 다른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유병화 남북한 정부간에 법적 문서 내지 제도가 마련됐다는데 대해서는 의의를 크게 평가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말이 많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가간의 조약이나 뭐냐 또 국회에서는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지지결의를 해야 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하나는 늘 법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 상식 이 두가지 선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에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변하고 새로운 양상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은 늘 변하고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분단국이라는 자체의 그 법적 지위가 매우 유동적인 우선 어떤 그 정적인 Sein상태에서 보면은 국제적으로 지금 북한이나 또는 남한이 하나의 국제법 주체 국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당위의 세계에서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던 말이  
예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국이고, 이러한 Sein상태에 가는 것이 하  
나의 목표고, 그것을 또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이 동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대외관계가 너무 공고해지면 내부관계가 약해져서 두개의 국가로 될 수가 있는 것이  
고, 또 내부관계가 정말 제대로 발전되면 대외관계가 결국은 하나의 국가로 변하기 때문에 상  
당히 유동적이면서도 동적이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목표를 어디다 뒀어야 되느냐에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고 볼 때는 목표라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구태여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뭐 조약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  
보다는 분단국으로서의 남북간에 어떤 법적인 문서로서 해석하면 되지 그것을 너무 다르게 주  
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이것을 구태여 비준동의라고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국  
회라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여론을 한번 걸르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법적으로 거쳤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니까 그것이 지지 결의든 뭐든 하여튼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남북한의 7.4공동성명만해도 그것이 정부의 기관이지만 그 기  
관 자체가 어떤 라인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묘한 것을 택했는데 요번에는 양쪽의 국무총리  
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봐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추상적 골격밖에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나와야 물론 성공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이런  
골격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도 이 합의서 만들 때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미리 합의를 해왔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변화도 있었고 변한다는데 늘 그 휴전상태  
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등을 너무 강조하는데 이것은 19세기적인 용어고 지금 휴전상태하고  
평화상태가 다른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휴전협정의 현대적인 개념은 휴전협정만으로 전쟁  
상태가 결국 해결이 되고 특히 평화조약을 체결한 예도 별로 없다는 얘기는 전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휴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다시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전쟁이 종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소의 불력체제가 돼서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력충돌도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서로 포기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되면 그것이 법적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국제법에서 지금 보는 현실적인 견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옛날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휴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이것은 좀 지양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불가침이라는 그런 19세기 용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꼭 사용하려면 무력충돌 방지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누가 누구를 침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우습고 더군다나 휴전협정이 있는데 무슨 불가침선언 한다느니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 백번 선언 해봐야 현재의 휴전협정이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메카니즘으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잘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합의서 5조를 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명하지는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태가 되더라도 휴전협정은 계속 존속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기껏 바꾼다면 미국이나 다른 중국 지원군 대표가 들어가 있는 조항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휴전의 법적 메카니즘을 우리가 지금 만든다고 해도 그 어려운 교섭 상대인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것 보다 더 나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충돌에 관한 법적 메카니즘으로서는 다만 이것을 유지하고 거기서 한걸음 더 발전 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의의는 있습니다.

10조를 보면 남북한의 의견대립이나 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거기에 따른 분쟁해결인 법적제도가 마련 돼야 되는 것이죠. 중재법원이라든지, 조정위라든지, 사실심사라든지 여러가지 구체적인 것. 그래서 지금 휴전협정으로 무력 충돌 할 수 있는 것은 막아 왔는데 무력충돌의 원인이 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는 전혀 없거든요. 또 법적인 제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7조에도 역시 남북간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설치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역시 평양하고 서울에 설치되어야지 판문점에 설치되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역시 서울하고 평양에도 설치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조를 보면 경계선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한건데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까 정교수님이 잠깐 얘기 하셨습니다만 서해 5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북한이 이따금 심술을 부리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다가 특히 7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위반을 했지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어느 나라든지 해안선에 영해기준선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해 12해리를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접속수역 24해리를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대륙붕 경계수역을 설정하는 그런 기준선이 있는데 그런 기준선 자체가 서해 5도 우리 수역의 일부를 지날 정도로 북한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만약에 영해를 그어놓고 자기네 수역이다, 그러면 서해 5도의 상당부분이 자기네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늘 해 왔는데 어쨌든 1953년에 휴전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나, 그 뒤에 여러가지 북방한계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정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지켜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북한에서 이의를 달아 왔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분쟁을 해결하는데서 의의가 있고 공로를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치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많이 있고 해서 나중에 3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용출** 다들 말씀하셔서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만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고 국제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개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뭐냐,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었느냐 또 국제화라는 것이 뭐냐,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남북끼리 푸는 것이 한반도화고,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한국화고, 국제적인 문제를 상식적으로 배격하는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차원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한반도화라는 것도 그렇고 국제화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양분법적으로 완전히 주도의 방향이나 또 정책이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라는 자체도 예컨대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와 국제적인 힘이 필요한 문제를 명확히 우리 스스로 구별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화를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는 절대 한반도화와 국제화라는 양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보면 성격이 전혀, 아까 장교수님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이것이 무슨 구도에서 설상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일단 그것이 시행이 됐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성격규정에 따라서는 의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상정한다 치더라도 이번에 양국간에 합의된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우선 내용에 관계없이 상징적인 의의가 있지 않느냐 즉 남북이 합의했다는 상징적인 의의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한 차원에서 볼 때는 평화회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 입장의 변화를 유도했다. 이것이 아까 정교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체제를 서로 상호 인정하는 이러한 문제, 이것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우리가 국제화와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생각을 이제는 벗어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장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내적으로 이 문제가 연결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대선 권력구조 문제, 이런 문제하고 자꾸 이것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을 낳는 문제고, 오히려 저는 그 문제가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의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북한의 기본적인 의도는 역시 4강체제에 의해서 교차승인을 받음으로써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볼 때는 북한으로서도 이번 합의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컨대 연형묵 연설에서도 나타났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북한의 핵사찰을 연결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의도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렇게 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이번 합의서에서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남북간의 기본적인 합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핵무기 문제가 오히려 남북당사자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핵무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됨으로써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체면을 유지하고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 소위 당사국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미국측에서 핵문제를 강경하게 들고 나왔다 하는 그런 차원은 시간이 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 비관보다 남북이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과거에 관건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 북한의 의도는 지금 말씀대로 현상유지적인 평화공존을 꾀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수교관계에서 대일 카드의 강화문제, 이런 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입장이 오히려 한반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고 특히 아까 장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작이라고 한다면 역시 일본이 더욱 더 소외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

기 때문에 2+4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장할 때는 일본 배제문제도 여기서 간접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내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수교이며 미국과의 수교는 곧바로 북한으로서는 현상 유지적인 공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이야말로 남한의 현상파괴적인 공존 내지는 흡수통일을 막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미국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볼 때는 단순히 무기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국내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 관계라든지 또는 대외적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대내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어떻게 해야될 것이라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스스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예컨대 중국적인 변화, 또는 동구라파적인 변화, 소련변화 어느 변화를 보더라도 북한이 쉽게 택할 수 있는 모델이 현재 없다. 이것이 북한이 국내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어떤 개혁을 원하더라도 어떤 모델을 갖다가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자체개혁에 대한 대안 모색은 당분간 계속되면서 대남적인 관계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상당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 회 지금 일반론하고 구체론이 엇갈려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론의 평가, 그리고 정책적인 합의의 일반적인 측면같은 것은 대충 의견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교수가 말씀하신 국제화하고 한반도화, 장교수가 말씀하신 국제화와 한국화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개념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두분 얘기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장교수 말씀도 이번에 미국이 합의서라든지 혹은 핵문제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미국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화라고 얘기하든 한반도화라고 하든 간에

그 내용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볼 때 특히 이것이 일반 세미나가 아니고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하는 일종의 정책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말씀 드리게 되면 당장 12월 26일날 남북한사이에 핵관련 실무회담이 있고 그리고 나서 1월 27-8일 그 사이에 비엔나에서 IAEA회의가 열려 북한의 국제사찰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월 18일날 제6차 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 고위급 회담에서 만약에 핵문제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비준서가 교환이 됨으로써 합의서가 발효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합의서가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6차회담 이전까지의 여러가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교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북한이 남북한 사이의 동시 사찰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핵문제를 구실로 삼아 계속해서 접촉을 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나온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12월 26일 실무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시범사찰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비핵지대화라든지 핵우산문제를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니까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양면 정책을 사실은 쓸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합의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최박사께서 얘기를 하시지요.

**최상룡** 지금 여섯분들의 정교한 분석을 들어보니 그만해도 이 합의서는 대단히 잘 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2년 7·4성명 때 그때는 상대가 외국인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 이후에 물론 실천이 안됐지만 그래도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번 합의서는 역사적으로는 7·4성명의 계승 발전이고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물론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만 그동안의 낙관론, 비관론을 다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이 합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교수와 차박사의 얘기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이 어떠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차박사님은 관변에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서 더 신뢰가 갑니다만 제가 접한 정보로는 사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 협의의 수준, 농도는 잘 모르겠어요. 사전협의의 농도가 짙고 체계적이라 한다면 장교수의 가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면 차박사가 옳은 것이지요.

이런 사실 확인을 토대로 얘기하라고 해도 헛갈려요. 왜냐하면 차박사의 얘기대로하면 북한이 미국, 일본을 두드려박서 안데니까 대한민국을 두드린 상당히 교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장박사 얘기대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농도가 짙다면 우리 신문 논조가 상당히 엉뚱한 것입니다. 사실 확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교한 추측이 나오겠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50:50의 추측설을 주장합니다. 가령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사실 기술적인 변화가 길어지면 전략적인 변화가 옵니다. 또 김일성 지도부의 정책결정 과정 및 능력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UN동시가입, 미·일 접촉문제, 이번도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상당히 결심하고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자기들이 예상한 이상의 성과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근본 라인은 이번은 뭔가 만들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특히 과거 북한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가만히 놔둬도 망할텐데 왜 성급하게 구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전선전략으로 인젠간 집어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이 강한 성향을 띠고,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일성 지도부의 변신가능성에 확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북한이 분명히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까지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걸 전문가적인 얘기니까 들을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놀람의 연속으로(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계론적인 시각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뒤쫓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

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만 하겠습니다.

**사회** 얘기가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은 핵문제에 관해 12월 26일 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 그게 1차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말씀을 들어보면 5차고위급회담에 임한 북한의 의도, 동기, 전략, 전술을 보게 되면 동시 사찰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깰만큼 핵문제에 대해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합의서를 진정으로 원했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나올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북한이 내년 1월부터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면 동시사찰문제를 12월 26일날 원만히 해결짓고 합의서를 파탄시키지 않을 정도로 성의를 보이고 1월말의 비엔나 회의에서 국제사찰을 받아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강제사찰의 가능성까지도 일단 배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핵문제를 남북간의 관계간의 걸림돌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제 6차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비준을 교환한 다음에 합의서 규정에 의해 1개월내에 분과위를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일본, 미국과의 수교, 관계 개선을 통해 결국 교차승인 쪽으로 나가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얻고 북한 체제의 인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합의서 채택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건 사실이지만 내년 국내문제와 관련 남북관계 자체의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국내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고 특히 북한의 대외관계가 내년도에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달중** 토론을 위해 우리는 왜 합의를 했고 북한이 왜 합의를 했는지 더 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정현** 그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었느냐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서와 핵문제를 처음부터 연계시키지 않고 별개로 다룬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같고 실지로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합의서와 북한 핵사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돼있지 연계시키지는 않는다고 했는



데 왜 이렇게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지금 합의서 채택을 하고 보니까 핵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별개로 기본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핵문제는 뒤로 돌렸느냐 이게 사실은 애매한 겁니다. 오히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서의 실천전망이 어둡다고 전망을 하는데 이것이 장박사 말씀대로 미국의 구도에 따라 한 것인지 한국 정부대로의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정책 결정자가 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계시키지 않은 것인지 논의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번 합의서 채택 과정을 보면 협상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한 논의와 판단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도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겠지만 정치적 측면과 연관돼 있는 부서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서 창출과정이 뭔가 허술하고 서두른 감이 있고 이런 것이 왜 나왔겠느냐 그런점에서 핵문제를 뒤로 돌리게 되었고, 이런 문제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북한이 기본 합의서 채택과 더불어 대미·일 관계개선에 유리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합의서 자체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교류면에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사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핵문제는 역시 양면성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는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동시사찰까지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속에서 북한이 남한과 더불어 비핵화에 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 미국이나 IAEA와 별도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북한은 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룡** 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사전협의를 된 것이에요.

**차영구** 그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할게요.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우리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핵개발 억제뿐 아니라 한국의 핵개발 억제까지도 바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핵개발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8일 노대통령이 비핵화 선언 하기까지는 미국은 우리와도 긴장 상태였어요. 우리가 비핵선언을 하지 않고서 북한의 핵개발 촉구를 강조 할수록 미국사람은 너는 핵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11월 8일 압력인지 뭔지 몰라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남은건 북한인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코너로 물고 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미국하고 도저히 협조를 안하면 안되는 분야가 많아요.

첫째로, 핵문제와 관련해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를 bargain ship으로 하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계획이 다된 것인데 정치적 결단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기지에 대한 인식문제예요. 미국 입장은 이것을 통치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핵무기 철수계획 문제예요. 이것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불가능한데 미국과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하면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관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핵억제 스케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NCND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미국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예요. 그다음 우리가 12월 18일 핵부재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에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문제예요. 쌍방간에 상호 정치적인 결단없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무성이나 정책 결정자가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동의한 것은 미국이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양보한 것이다 라고

됩니다. 미 국방성은 이것에 반대입니다.

저는 기본합의서와 핵을 연계시키지 않은 것은 한국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계를 하다보면 남북관계가 진척이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결단이지 미국이 공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해서 된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 회 우리가 합의서와 핵문제를 연계시켰다면 미국과의 입장과 맞는데 일단 분리한 것은 적어도 12월 말에 북한이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영구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하든 강조해야 합니다.

장달중 논리적으로 내가 차박사에게 동의할 수 없는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합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철수하지 않을 명분이 생겨요. 합의서와 핵문제를 연계시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면 미국이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차영구 합의서에 동의하고 핵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미국이 나간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주한 미군이 핵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장달중 정치적 명분이 약화되잖아요.

사 회 미군철수문제는 이것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얘길 보면 오히려 미군주둔을 주장하는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미국이 일본을 상당히 견제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박사 얘기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용출 문제는 북한이 제시한 전제 조건이 핵사찰문제에서는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남북한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도를 북한에 표시하고 만약에 그 의도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엔 국제적인 압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선에서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북한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우리가 한반도화 할

수 있는 것은 먼저하고 국제화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다루자는 의견은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박사도 얘기 했듯이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되어 하고 미군철수도 저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군철수를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원한다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미군을 통해 남한에 대한 견제역할을 공개적으로 원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되지 않으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군산, 영변문제를 남북한이 먼저하고 그다음 국제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겠다고 분리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적인 사찰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볼 때 그러한 전략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사 회**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볼 때 시범사찰을 북한이 수락해 주고 1월말에 있을 비엔나 회의에선 핵안전협정 서명을 안하고 그런 얘깁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얻는 것은 뭡가요.

**하용출** 여기있는 연형묵의 연설을 보면 국제사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남북한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돌리고 시간을 벌자는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시점을 전후로 국제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장달중** 차박사 의견에 동의하고 싶은 것은 핵문제가 국내 정치의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정통성 등 모든 면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핵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재야에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핵문제를 찬성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재야가 거기까지 갔다가 요즈음 주춤한 상태예요. 옛날부터 이부영씨가 핵을 없애라고 그래왔지만 지금은 재야나 학생운동권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를 완전히 없앤 것예요. 그것이 계산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내 정치에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사 회** 지금 대중 얘기가 모아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 제6차 고위급 회담의 전망에 대해 얘기가 남아 있는데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하죠, 여러가지 북한이 앞으로의 정책적인 대응,

상황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우리의 대응 부분은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북 정책적인 대응이 있겠어요.

지금 북한이 대남 정책전략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입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문제를 가지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핵문제를 분리시켜 가지고 합의서에 지장이 올 정도로 북한이 핵문제를 절절 끌어가는, 지지분하게 승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그런 태도를 취할 경우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비준해가지고 가는 경우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지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하고도 관계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북한을 제외한 대외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특히 이것은 북한을 일본 대 미국정책과 관련 지어가지고 우리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대응이 되겠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은 가정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일단 합의서의 서명 과정에 있어가지고 생겨났던 여러가지 국내적인 기대, 이것을 우리 입장으로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뭐냐,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박사부터 먼저 말씀할까요.

**최상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코 순탄치가 않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저는 이번 합의서를 계기로 해서 남북이 평화공존 틀의 궤도에 올라 섰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한이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지연 시키려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평화공존의 틀에 들어왔다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주의깊게 봅니다만 북한에서 나오는 편지, 공문서 모든 것을 봐도

평화공존이라는 말을 아직 안 씁니다. 이것은 역시 옛날 분단고정화라고 하는 콤플렉스인데 그 말을 쓰고 안 쓰고는 별문제고, 실질적으로 평화공존의 틀에 들어왔다고 하는 바탕에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것은 체면과 돈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통일하지만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김일성정권 유지 고수,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애초에 북한의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반반의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된다. 구질구질하게 자꾸 판소리를 하면서 핵사찰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고 깨끗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실무자들은 두 가능성의 비중을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후자가, 어쩌면 깨끗하게 아까 놀랍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놀라움의 연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과 돈문제인데, 북한이 예상을 뒤엎는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은 역시 돈이라고 봅니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것은 경제, 즉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제일 절실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또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과 북한이 정상화 되게 되면 조총련으로부터 엄청난 현금이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 갑니다. 그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때는 일본도 흔들흔들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2호, 3호 원자로 핵 재처리공장 사진을 한 60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1호는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2호, 3호는 완전히 핵무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 재처리공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한때는 일본은 긴가민가 했어요. 불란서 TV에 나오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아마 국내에서 본 사람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진을 제공한 이후부터는 일본도 상당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핵문제에 관한한 일본도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의외로 사

찰에 응할 경우에는 북한과 일본의 정상화는 급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다나베 위원장이 북한을 갑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뭔가 친서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 네마루와는 일상적인 통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급속도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합니다만 일본이 어느 정도 핵무기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의 합의서에 조금 더 성의를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것은 역시 돈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보다도, 그점을 실무자께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회 우리의 대응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 될까.

최상룡 이미 합의서가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핵문제에 대해서 성의있는 북한의 대응이 있는 한 일본과 북한의 접촉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이유도 없고, 그것은 어차피 막아도 오는 거니까, 오히려 좀더 중장기적으로 봐서 결국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내지 교차승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정상회담은?

최상룡 정상회담은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심까지 받으면서 불변하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두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도 내각제, 그것이 없다면 지금쯤에는 없다는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것에 대한 욕구는 아직도 살아있고, 두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욕구는 그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것은 강렬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2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서 등등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뜻이 최근에 조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시점만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정상회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9월 26일날 야세로스키를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만

나서 평양냉면만 먹고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7천만 조선인민이 우리 둘을 보고 있는데 뭔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내놓으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내놓는 것이 두가지인데 불가침 합의, 그것은 이미 총리 수준에서 됐고, 그다음에 통일방안입니다. 통일방안에서 김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연방제가 제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내놔라 내놓으면 검토를 하겠다.”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연방제 콤플렉스가 있는데 연방제 콤플렉스라는 것은 내용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지만 그 표현자체에 대한 오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방제와 우리의 국가연합을 결합할 수 있는 제3의 말하자면 언어, 개념, 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뭔가 정상회담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결코 통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습니다. 그것 또한 평화공존의 성숙 제도화에 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평화공존의 성숙한 차원, 성숙한 평화공존과 연방제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상당한 수준의 평화공존이 되면 그다음에 연방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엔 제도적인 문제고, 전번에 김대중선생이 우리학교에서 얘기를 할 때 세단계를 얘기했는데 첫단계입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고 첫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첫단계가 말하자면 우리의 국가연합, 저쪽의 연방제의 초기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평화공존의 성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의 평화공존이라는 것이 독일처럼 20년 이상 걸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꽤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용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이렇게 남북한간에 정책 또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문제시 된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과거의 남북한간에 벌어졌던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오갔던 일들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평상시에 낙관론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낙관적인데요. 이 핵사찰 문제도 북쪽에서 여러가지 이번에 합의서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한후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으나, 그런데 북한이 염려하는 것은 두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결국 현상 고정적인 공존체제의 수립이 문제고, 또 하나는 국내적인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남북한과 또는 핵사찰문제를 통해서 전자 즉 북한의 주변환경이 국내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는 이것이 현재 북한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당근을 준다면 역시 핵사찰문제와 북한이 대일, 대미관계에서 우리가 전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당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역으로 체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의 국내적인 사정과 남한으로부터의 국내적인 압력 특히 북한이 이번 기본합의서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남한전체의 제야, 보수할 것없이 다 놀렸는데 그 놀란 것이 대 북한관계의 신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핵사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놀람을 또하나의 놀람으로 해가지고 전혀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될 경우에는 남한의 여론이 상당히 북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대남한 공포감이 다시 조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적으로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일, 대미 관계에서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여타 서방국가 관계에서도 북한이 여러가지 어려운 관계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일본과 미국 또는 주요 국가들과 회담전에 여러가지 교섭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뭔가 지난번에 체니가 와서 했던식으로 체적과 당근의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식발표 같은 것이 하나쯤 나오는 것도 핵사찰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주변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나,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대화의 추진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합의서에 추진된 대로 하되 다

만 너무 국내적인 요인때문에 밀어 붙이는 식으로 나갈 경우에 북쪽에서는 그것을 또하나의 대남한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고 그래서 남한에서 계속 내버려 두면 고사할 정권을 도와주냐 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상당한 공존기간을 거쳐서 체제연합으로 가자는 이런 입장 사이에서 남한내부의 여론이라는 것이 과연 완전히 정립이 된 것이냐, 따라서 그것을 정립한 후에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두가지 문제, 흡수적인 함축을 갖고 있는 태도와 공존의 태도를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북한에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본합의서라는 것이 사실상 별 진전을 못 볼 것이다.

예컨대 지금 저쪽에서 여기 연형목의 연설과 합의문에 나오지만 교류문제라든지 인적, 물적교류, 언론,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다시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다른 문제까지 어려워질 것 아니냐, 또 하나 의외로 북한이 군축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국방비라는 것이 엄청난 GNP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대가 정치적으로 김일성이가 살아 있는 동안 어느 정도 이것이 정비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계속 끌치 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히 남한의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북한도 상당한 차원에서 군축문제에서 적극성을 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동한시 했던 군축과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역설적으로 과거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기대를 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저는 정치적인 얘기 보다는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법률적인 문제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의서가 나와있지만 문제가 급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2월 18일부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 여러가지 범

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서둘러 만들어도 아마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 내용은 어쨌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에 평화공존이던 어쨌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교류를 하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그런 것이 우선 마련되어야 되고 또 저쪽의 의도가 진정하다면 그런 쪽으로 흘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놓고 뭐를 해야 저쪽도 우리 방향으로 가지 그냥 그때 그때 급한대로 해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법률관계 그것을 기본협정이라고 그래도 좋고 뭐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 거기에는 다시 세가지 법률분야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제도관계를 설정하는 법률관계가 교류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고, 분쟁해결을 시행하는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관계는 일단 여러가지 우선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둔다는데 지금 여기있는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서로 불편해서 안 될 것 같고 결국 평양이나 서울에다가 어쨌든간에 대표부를 두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예를들면 그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특권이나 면제라든지 외교관계 비엔나협약 같은 뭐가 있어야 이것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마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공동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다 보면 아주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유럽공동체의 이사회의 운영관계에서 어떤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유럽공동체에 집행기관은 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제기관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는 각 정부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유럽공동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유럽이사회라는 것은 정부수반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이고, 그다음에 각료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각료이사회로 외무장관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전문 각료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이 뭐냐하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령 재무관계는 재무부장관이 가고, 농수산관계는 농수산장관이 가고,

상공관계는 상공부장관이 가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각 위원회를 하다 보면 국가기능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도 못하고 또 어떤 것은 일시적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뭘 연구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가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류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경제관계라든지, 사회교류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투자관계라든지, 세금관계라든지, 외환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통일원에서 뭔가 조정하고 전반적인 설계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역시 분쟁해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남북간에 교류관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분쟁이 안 생길리가 없어요. 그런 법률관계 분쟁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물론 지금 구조를 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난 것을 서울의 어떤 법원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양쪽 문제에 결부되었을 때 무슨 막연하게 어떤때 보면 무책임하게 국제사법 법원에 가지고 간다는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식한 얘기고, 국제법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내법원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재판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도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자기가 이긴다고 착각을 하기 전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 해결제도는 가령 중재법원을 만들고, 조정을 하고, 사실 심사기관을 만들고 여러가지를 미리미리 해놓고 양쪽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사실 교류가 시작되면 아마 굉장히 그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차연구 우선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예상되는 남북한관계 시나리오, 두번째는 향후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세번째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첫번째 예상되는 남북한관계의 시나리오는 세계의 시나리오로 그럴 수 있는데 첫번째 시나리오가 이름을 붙이자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시나리오, 세번째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 시나리오는 핵문제에 관한 한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여기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북한이 IAEA에 가입한다. 그리고 IAEA로부터 사찰을 받는다.

둘째, IAEA에서 강화된 사찰까지도 수용한다. 말하자면 아무데나 보고 싶은데를 볼 수 있는 것까지 수용한다.

세번째, 남북한간에 동시에 사찰을 한다.

네번째,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한다.

다섯번째, 이와같은 모든 것을 천명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핵도 없고, 우리가 한 것처럼 등등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이 다섯가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처리인데 그것들이 어떤 최고의 수준까지 다 해결이 되고, 동시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실무접촉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 같은 것을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핵문제에 관해서는 제한적인 해결만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북한이 최저의 수준만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IAEA에 관계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시사찰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느 지역 우리의 어느 지역 그것만 하고 다른데는 일체 보여주지 않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숨을 돌리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하고, 실무협의회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적으로 자기네들이 당장 급한 부분 아까 최상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돈의 문제라든가 자기네들이 당장 급한 부분들 그것만 일부 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번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나쁜 것인데 핵의 진전이 없고, 정상회담도 없고, 좋지 않

은 것입니다.

대개 이런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두번째 시나리오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 다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정했을 때 남북한관계를 어떻게 몰고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핵문제에 관한 다섯가지 중에서 무엇까지를 우리가 만족할수 있는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AEA에 들어가고 남북 동시사찰하고 비핵에 관한 선언까지는 해야된다, 재처리시설까지는 조건을 달지 않겠다 이런다든가, 다냐 아니면 세가지나, 두가지나 하는 문제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몇가지 요구사항이 결정되면 그것이 될 때까지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 문제에 관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다섯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쪽으로 강경하게 몰고 나가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는 북한의 여러가지 입장도 있을테니까 거기서 조금씩 양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 동시에 정상회담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양쪽에 다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두번째 부분은 실무적인 협조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럴텐데 실무적인 협조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체제를 개방시키는 가장 아픈 부분, 북한이 아프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 양쪽에 다 해당되고 북한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융통성있게 하고 우선 양쪽이 이득이 있고 가능한 것에도 초점을 맞추는 좀 신축성 있는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일단 그렇게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앞으로 마지막 시점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대내체제에 대한 정비, 개편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각종 문제들, 지금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의 인식문제도 있고, 북한에 대한 불신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축이라든가 군비통제, 불가침, 이 부분은 어떤 분야보다도 예민한 분야인데 이에 대해

서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사찰한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가서 체크를 하고 어떤 것을 봐야 되고 하지, 사찰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최상룡 박사님이 만약에 사찰하러 가신다면 북한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가가 봐야 이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것에 준비를 했느냐고 볼 때는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화체제 공고화 문제는 유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평화협정을 맺어라 라고 우리가 애당초에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것 이름이 뭐든지 간에 하여튼 분쟁을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상당히 급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서로 믿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한 일중의 하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제법 있을 것이고 또 옹호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찬반세력이 갈라 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좀 분열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라든가 새로 국회가 형성되면 우리 국회에서 뭔가 국론의 분열같은 것을 막는 어떤 동의라든가 뭔가 지지해주는 이런 범주는 우리가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염려되는 문제가 한미관계 부분인데 한미군사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조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 약간 후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옛날로 좀 속도있게 진전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일이 많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축문제라든가 등등,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청사진 같은 것은 하나 그려놓고 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가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조금 연기하

는 그런 식으로 체제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달중** 얘기들이 대충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정부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북한도 마찬가지겠습시다라는 우선 첫째 적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모든 계획이 지금까지 적을 상대로 해놓고 예산을 책정해왔고,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해도 하기 쉬웠다고요. 사실은 통일원장관도 여태까지 상당히 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비가 적의 개념이 뭐고, 우방의 개념이 뭐고 이것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침선을 많이 만들어서 그선에 따라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국제화냐, 민족화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북한을 개방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목표고 또 그것이 보편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한의 한계가 있었고, 남한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했지만 일단 이러한 과정이 실지로 전개가 되고 나니까 이 국제적 힘에 의한 북한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위험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남북한 관계 급진전에 한 중요한 변수를 들라고 하면 역시 가네마루의 북한 방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네마루의 북한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한반도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가네마루가 일본과 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택하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네마루가 정치적인 좌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중국갔다 등소평이도 못 만나고 망신당하고 와서 이것은 일본에서 거의 정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이나 일본에 상당히 강하게 있다.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움직여지다 보면 우리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외국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한 예를 들면 통일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중에 외무부에 UR협상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은 내가 저녁을 샀더니만 영영 울어요 밥먹다 말고, 왜 그러냐 물어 봤더니 여기서 전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며칠날까지 안되면 며칠날 3단계 떨어나라. 첫날밤 11시가 되니까 저쪽 미국대표가 다 아니까 대 내놓으라고 그러드레요. 너희 떠들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는 보따리를 가지고 갔는데 벌써 미국에서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 자기가 거기서 영영울고 미국 여자대표가 말하자면 위로를 해줄 정도로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된다.

그다음 두번째 핵문제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여론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절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핵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한반도에 떨어지고 한반도에서 서로 치고박고 우리나라 다 죽이는 것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하나 예를 들면 일본의 뉴스위크 창간호가 나왔어요. 창간호가 나왔을때 이상우 교수님이 얘기를 하다가 잘못 얘기해 가지고 한국 사람중에는 핵이 나가사끼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지지 않고 동경에 떨어졌으면 좋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이로서 뉴스위크에 전화가 와서 협박도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다음에 원자폭탄 이교수라고 알려져 있다고요. 이것이 뭐냐하면 인류의 소위 말하자면 절대 건드릴서는 안될 부분, 이 핵문제, 이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로 막아야 할 문제고 도덕적으로 남한에서 여론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서 이것은 남한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저는 키신저의 회고록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키신저 회고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국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미소관계라든가 세계의 외교정책이 거대한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완전히 임기응변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 끝에 역시 국무장관이 될려면 자기처럼 되기 전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선 실무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갔을 때 여기서 얘기되지 않은 부분이 자꾸 순간순간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할텐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계속 이런 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항이라는 것이 상당히 혼란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혼란을 겪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을 해오는데 그 대응형태는 상당히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될 것이다. 예측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까지 실망해 오지도 않고 살아 왔는데 다만 제일 걱정스럽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군사적 균형문제이니까 군축의 한계를 최소 요구화 하고 최대 요구 구도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겠죠. 그런 것을 충분히 이쪽의 군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국내 여론에서 미군 나가면 당장 우리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방어하는데 충분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내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현** 시간도 많이 갔고 앞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핵문제와 기본합의서 실천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분리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문제가 서로 상관성은 갖지만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나 또 변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다만 핵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로 취급을 하되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확고한 입장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이 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정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설정에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기본합의서를 추진해 나가는데 관련해서 교류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경제교류를 할 때에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남북한간의 교역, 간접교역이든지 직접교역이든지 이런 교역에만 머물지 않고 합작투자라든지 우리의 자본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직접투자 같은 이런 방식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최근에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교역은 해봤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북한에서 가능하다면 합작공장 같은 것을 세워서 생산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본은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북한을 상대로 일본자본과 한국자본이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자본과 기술이 먼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작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경제교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는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정치나 여러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문제를 비교적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자신도 고위급회담의 성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왕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리해야 될 것이고 우선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상징적 보다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통일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남북연합 체제라든지 고려연방제 체제라든지 양쪽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제연합식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 정상회담을 정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1회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 그 밑에서 분야별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좀더 남북한 관계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착시키는, 안정시키는 그런 계기로서의 정상회담이 되어야지, 이것이 단순히 냉전이후의 역사적 의미만을 가지고는 정상회담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역시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물론 핵문제가 걸려있습디만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미국의 대북한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남한과의 관계속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제규모로 봐서는 별거 아닙니다만 일본의 자본과 시장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이해관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장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결국 한·미·일간의 삼각관계는 아니라도 쌍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대북관계에 있어서 사전협의하는 이런 것도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대북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사전협의하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 과정 같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합의서와 국내정치 문제인데, 사실 지금 문제는 이것이 실재는 언론계에 많이 떠돌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특히 업계의 경제교류 전망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기대가 큰데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논의한 바와 같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대를 어떻게 축소시키고 현실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국내 정치상황하고도 연결된다고 보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도 하 교수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합의서를 채택해서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흡수통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통일이라는 방법은 흡수통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통일을 하면 부담도 많고 하니까 공존과 공영관계를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회내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합의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 남한이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에서의 여론형성 같은 것에 좀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내년이 정치 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정치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남한 사회의 내적인 요인때문에 추진되지 않을 그러한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경제교류하고 관련해서 법률적인 것을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남북한의 관계는 역시 특수관계, 내부관계로 이끌어 가야지, 그것이 가령 GATT체제의 규제를 받는다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여러가지 국제체제 그것은 생각보다 조금 세밀하고 중요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달중** 쌀문제도 절대 안된다고 벌써 미국에서 압력을 넣지 않았어요?

**유병화**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죠. 그것은 법률적으로 특수관계라는 것은 분단국의 특수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다고 중국이나 대만관계 같은 것도 묘한 관계가 있

지만 우리야 내부관계로 발전시켜야죠.

**장달중**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들면 가능합니까?

**유병화** 그것은 가능해요.

**장달중**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유병화** 법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법하고 현실하고 자꾸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되죠.

**장달중** 미국에서 쌀문제를 가지고 제동을 걸면 301조를 발동시킨다는 식으로 지금 벌써 보도가 됐는데

**유병화** 그래도 그것은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힘의 논리로 얘기하는 때가 많은 미국이 법 같은 것이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의외로 미국이 가입하지 않고도 가령 해양법이라든지 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같은 중요한 법에 미국이 다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힘가지고 그것을 막는 것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장달중** 북한이 미국쌀 필요할지 모르지. 싸니까

**사 회**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이 힘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를 회고해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실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통일원 특히 대화사무국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어떤 의미에서 금년도에 씨를 뿌렸다면 수확을 하는 그런 첫해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비가 오지 말고 날씨가 좋아야만 내년도에 첫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것이, 계절이라고 그러는 것이 반드시 우리 의사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 대화사무국으로 볼 때는 당장 2월 18일날 평양에서 6차 고위급회담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가지 논의를 했지만 대충 지금 봐가지고 비준서가 교환이 되고 합의서가 발효한다고 그럴때

1차적으로 평양가서 우리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비준서만 교환하고 사인하고 사진찍고 이제는 남북한관계를 우리가 얘기했던 그야말로 제도적인 공존시대에 들어 갔다는 그런 얘기만 가지고 되겠느냐, 특히 내년이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우리 대표들이 평양가서 역사적인 문서를 교환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 지어서 합의서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담겨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핵문제는 그안에 어느 정도 차박사 얘기대로 중간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해결은 되어서 체면유지는 하겠지만 이산가족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느끼는 강도가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부분에 관해서 합의서에 조금 아쉬움을 남긴 점이 있습니다만 언론 출판물에 대한 상호개방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장 분단의 고통을 덜어가는 그런 조치는 이번에 특히 6차회담에서 진전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합의서의 수확의 첫 해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외에도 대화사무국에서 여러가지 많은 것을 계획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6차회담에 대한 대책방향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과연 합의서가 발효될 것을 전제하고 통일원이 취해야 될 정책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의서 발효이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겠느냐 특히 정상회담하고 반드시 관계있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통일의 방안문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합의서가 통일의 방안에 대한 그런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의 방안을 얘기할 남북한간의 공동기반은 마련되었기 때문에 민족공동체 방안하고 북한의 연방제하고 절충해서 새로운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때 내년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대비를 유교수님이 특히 강조를 해주셨고 다른 분들께서는 군축과 교류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원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정책개발, 연구, 그리고 국내홍보, 대화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군축문제를 통일원에서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신뢰구축, 군축문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정말 연구를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교류협력 문제도 최근 신문에 보게 되면 대화사무국이 교류협력청으로 바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문제도 과거에 통일원에서 해왔던 그런 홍보차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 통일방안이라든지 통일을 전제로 한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집결하는 합의기반의 창출이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에 대외관계 특히 차영구 박사가 얘기한 미국과의 관계, 군사문제를 포함해서 대미관계의 중요성 또 국내정책적인 그런 여러가지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는 결론이 필요없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봐서 역시 내년도 우리 입장으로 볼때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를 일단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 보다도 전술전략적인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중국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개방과 정치적인 보수성이라는 그런 것을 북한에게 기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합의서에서 나타난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하면 북한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내년의 남북한 관계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 경제면에 있어 남북한 관계에 보다 더 신축적인, 아까 몇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축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신축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는 것이 과거와는 대단히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성 그러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냉전시대 혹은 91년까지 가져왔던 북한에 대한 그런 신축성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체제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국내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전제로 한 그런 의미에서의 신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실무적인 문제는 통일원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南北基本合意書」採擇 이후의  
南北對話 展望

統對 92 - 1 - 5

1992年 1月 30日 發行

發行處：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印刷處：(株) 盛林文化